

가짜뉴스와 기독교

공동포럼

일 시 | 2018년 11월 21일(수) 오후 7시

장 소 | 한국기독교교회관 2층 조에홀

주 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성서한국, 한국기독교언론포럼

후 원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발행일 | 2018년 11월 21일(수)

발행인 | 김지철, 박종운, 백종국

편집인 | 박제민

발행처 |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전화 02-794-6200 홈페이지 cemk.org 이메일 cemk@hanmail.net

성서한국

전화 02-734-0208 홈페이지 biblekorea.org 이메일 biblecorea@gmail.com

한국기독교언론포럼

전화 070-7437-4293~4 홈페이지 kcmf.net 이메일 project@kcmf.net

순서 및 목차

사회 : 이상민 변호사(법무법인 에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좋은사회운동 본부장

7:00~7:30

발제 1 : 손승호 연세대 한국교회사 박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한국 기독교, 가짜뉴스의 추억 4쪽

7:30~8:00

발제 2 : 변상욱 CBS 대기자

[참고자료 1] 가짜뉴스 리터러시 13쪽

[참고자료 2]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교회의 위기와 과제 21쪽

8:00~8:30

발제 3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상지대 초빙교수

최근 혐오·증오·편견에 기반한 가짜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사회적 대책에 대해

: 법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36쪽

8:30~9:00

질의 및 응답

한국 기독교, 가짜뉴스의 추억

손승호 (연세대 한국교회사 박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간사)

1. 들어가며

많은 이들이 한국교회의 추락을 안타까워한다. 한국교회의 추락은 어느 한 방면에 국한되어 있지 않다. 도덕적·종교적 권위는 무너진 지 이미 오래이며 이제 그 결과로 양적인 쇠퇴와 헌금규모의 축소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시기 보수 개신교가 광장으로 진출한 이래 한국교회의 사회적 영향력은 오히려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한다. 그 입장이 멋지냐 구리냐, 또는 기독교적이나 아니냐를 떠나 특정 사안들에 대한 보수적 입장을 대변하며 정치권을 압박하여 그 영향력을 과시하는 사례들이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은 권위와 신뢰가 무너진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비상식적인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최근 한국 개신교가 ‘가짜 뉴스’ 생산과 유포의 근거지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이들을 아연실색하게 하였다. 그 원흉으로 지목된 모 세력은 언론사들을 상대로 ‘자신들에 대한 종교 탄압이며 이야말로 가짜 뉴스’라고 항변하고 있지만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 사태를 한국교회의 추락을 넘어 타락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 중 몇몇에게는 섭섭하게 들릴 말을 해야겠다. ‘한국교회는 예전부터 가짜뉴스 생산지였다. 다만 그동안은 당신이 그들의 동맹세력이었다가 이제는 아니게 되었을 뿐이다.’

이 글은 한국교회가 보수정권과 결탁하여 거짓 정보를 전달하며 약자들을 억압하는 한편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았던 사례가 이전에도 있었음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몇몇 사람의 실명이 거론될 수도 있는데 부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시길 바란다.

2. 1970년대 산업선교 용공시비의 내용 : 홍지영·박병훈의 원투 펀치

진보적 기독교계를 향한 용공시비는 제법 오래된 문제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의 통합과 합동의 분열 사례에서도 WCC의 용공성이 명분으로 제시된 바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적어도 1959년 이전부터 이 용공시비는 존재해왔다. 그러나 1970년대 중반부터 격렬해진 산업선교에 대한 용공시비는 내용상에는

분열이후 합동계열의 교단들이 주장해 온 것과 큰 차이가 없으나 “정부의 비호로 보다 정교하고 전략적으로 다듬어져 교계의 울타리를 넘어 한국사회 전체로 확산되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다.¹⁾

산업선교는 처음에는 전통적인 전도에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공업인구가 늘어나고 대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자 ‘물고기가 많은 곳에 그물을 던지겠다’는 사람 낚는 어부의 전략으로 산업선교가 시작되었다.²⁾ 따라서 초기에 한정하자면 산업선교는 용공시비에 걸릴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1972년 이전에는 어용노조였던 한국노총과 도시산업선교회 사이의 우호적인 공존이 이루어지고 있었다.³⁾ 문제는 이렇게 복음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노동자들을 찾아간 기독교인들이 노동자들의 삶의 자리를 목격하게 되면서 시작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교계의 산업선교가 기존의 현장 실무자들을 중심으로 노동자 교육, 노동조합 지도자 훈련, 민주적 노동조합 조직 같은 노동운동에 개입하자 산업선교에 대한 용공성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1972년 7월 인천 기독교도시산업선교위원회 총무 ‘조승혁이 중앙정보부에 연행되어 고문당하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은 산업선교에 대한 정부의 간섭과 방해를 알리는 신호탄’⁴⁾이 되었다. 그리고 1976년 격화된 용공시비와 함께 정부는 산업선교의 불법화를 시도하였다. 1976년 11월 교회협 총무 김관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NCC가 용공적이라는 비난은 20년 동안 줄기차게 들어온 것이지만 근래에 와서 교계의 일부 사람들이 활자화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 책자를 일종의 불온서적이라고 봅니다. ... 이 책자는 저자도 없고 발행자도 유명단체이고 문공부에 등록도 되지 않은 책이 유포되었다는 것은 사회질서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NCC는 최근에 와서 선교자유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⁵⁾

김관석이 이런 발언을 한 것은 1976년부터 정부와 보수교회가 반공을 매개로 결탁하여 문서를 통해 진보적 교계를 공격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976년 1월 한국종교문제연구회가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 4월에는 서울시경 제2부국장 김재국(영도교회 장로)이 『한국기독교의 이해』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정부와 한국노총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졌으며, 『한국기독교의 이해』는 수사기관의 교육교재로 사용되었다.⁶⁾

1) 장숙경, 『산업선교, 그리고 70년대 노동운동』(선인, 2013), 293.

2) 1957년 산업선교를 가장 먼저 총회적 차원에서 시작한 예수교장로회는 산업선교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기독교인 고용주와 기독교인 고용인이 산업사회에서 기독교인다운 생활을 하도록 장려한다. 2. 개개의 기독교인이 산업사회의 비신도들에게 생활로 그리스도인을 증거하게 한다. 3. 교직자들로 하여금 기독교의 입장에서 산업사회의 제반문제를 선교하게 하여 신도들의 관심을 환기시킨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전도부 산업선교위원회 편, 『교회와 도시산업선교』(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교육부, 1981), 36에서 재인용.

3) 김원, “1970년대 민주노조와 교회 단체: 도시산업선교회와 지오세 담론의 형성과 모순,” 『산업노동연구』 제10권 제1호(2004), 70.

4)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3』(서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9), 229.

5) “사회구원은 반기독교적인가?,” 『기독교사상』 221(1976. 11), 82.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는 10명의 ‘기독교적 동지’가 공동 집필한 책이다. 이 책은 『현대교회 국제 기록 7권』의 자료를 인용하여 “일본 기독교계가 조총련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공작을 벌이고 있으며, WCC가 민중해방과 사회구조 전환 등을 강조하면서 기독교로 가장하여 공산주의의 계급사상과 폭력사상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WCC계통의 선교자금으로 운영하는 도시산업선교 사업이나 수도권특수선교 같은 것은 그 이념과 현실 면에서 기독교 정신과 방법이라고는 이해할 수 없는 계급투쟁의식을 선동 고취하려는 것이 엿보인다”고 평가하였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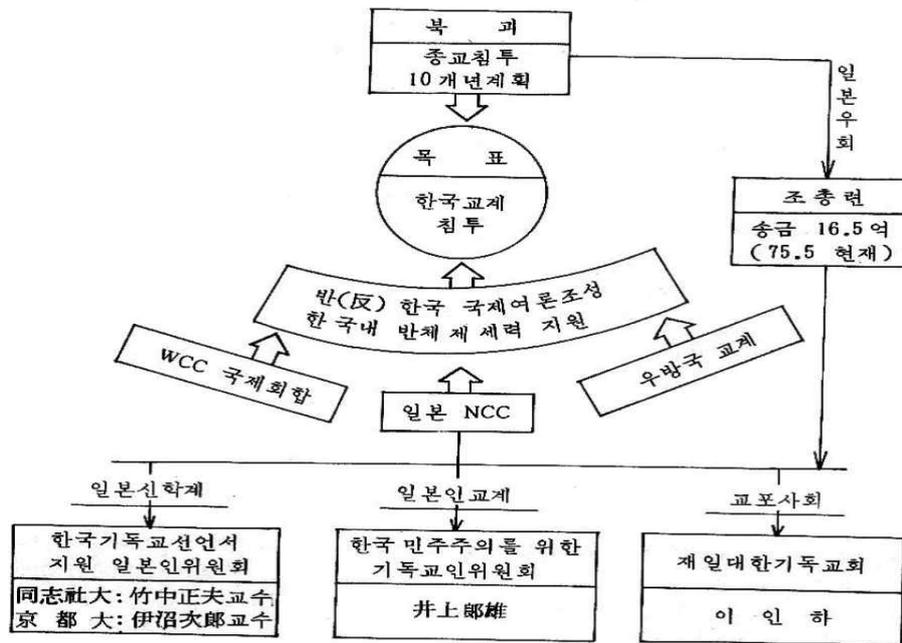


그림 1 : 북괴 대남종교침투 추정도⁸⁾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의혹을 낳았다. 첫째는 발행처인 한국종교문제연구회가 정체불명의 단체라는 것, 둘째는 공동집필자 ‘기독교적 동지 10명’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는 것, 셋째는 주요 근거로 활용되는 『현대교회국제기록 7권』 역시 정체불명의 책이라는 것이었다. 한국공작의 거점으로 지목된 일본의 NCCJ는 이 책에 등장하는 “사회주의를 위한 크리스찬 위원회”, “한국 민주주의를 위한 기독교인회”라는 것은 일본에 존재하지 않으며 북괴의 앞잡이가 되어 활동한다는 일본 기독교단체

6) 『한국기독교의 이해』는 ‘종교의 사회참여 행동으로 인한 다중범죄 유도행위’가 치안 문제가 되고 있다며 종교의 사회참여 행동을 ‘첫째, 신학사상이 공산주의자들의 혁명전략과 흡사하며, 둘째, 선교자유를 주장하며 실제로는 정치운동 내지 혁명운동의 자유를 교회가 부르짖게 유도하고 있으며, 셋째, 이런 신학사상을 바탕으로 한 선교조직은 도시산업선교회, SMCO, KSCF’라고 주장하였다. 손승호, 『유신체제와 한국기독교 인권운동』(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162-163.

7) 장숙경, 위의책, 298-300.

8) 한국종교문제연구회,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1970년대 민주화운동 II』 867에서 재인용.

인사들의 이름 가운데 대부분은 10년, 20년 전에 은퇴했거나 사망한 사람들”이라고 반박하였다.⁹⁾

한편 비슷한 주장이 박병훈을 통해 제기되었다. ICCC 계열의 인사로 분류되는 그는 1962년 예장 합동에서 분열하여 호헌총회를 창립한 인물이었다. 그는 1978년 「공산주의 서방교회 침투와 한국교회」라는 소책자를 발행하여 WCC, CCA, NCCK와 그와 연대되어 있는 산업선교를 용공이라 주장했다.

누구든지 WCC, CCA를 용공이 아니다하지 말라. 그 수하에 있는 KNCC를 무관하다고 하지 말라. 이 뿐 아니다. 붉은 수뇌들의 또 하나의 전략이기도 한 WSCF나 ASCF, 그리고 이들에게 배우고 여기에 젊음을 불태우고 있는 KSCF를 더 이상 변명치 말아라. 무산대중에게 복음을, 산업전사에게 신앙으로 회개와 구원을 전한다면서 민중조직을 설세없이 다지고 있는 산업선교 프로그램을 시대적 전도 활동이라고 하지 말기를 제안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꼬리가 밟혔고 청천백일하에 본색, 붉은 색소가 벌써 노출된지 오래다.¹⁰⁾

복음전도의 탈을 쓰고 산업전사들에게 먼저 “계급의식”, “계급투쟁”을 불어넣고 “민중조직”을 가진 뒤 저항, 항거, 도전, 투쟁의 힘을 양성하여 그 “민중의 힘, 역량”으로 파업, 폭력, 나중에는 사회혁명이나 체제혁명을 노리는 소위 공산주의 혁명전략을 성경과 설교, 기도, 찬송 속에 넣어서 한몫 보는 것을 그들 “산업선교”라는 운동이라고 하면 아니오 할 사람은 없다.¹¹⁾

그리고 친절하게도 ‘불순세력침투체계도’까지 첨부하여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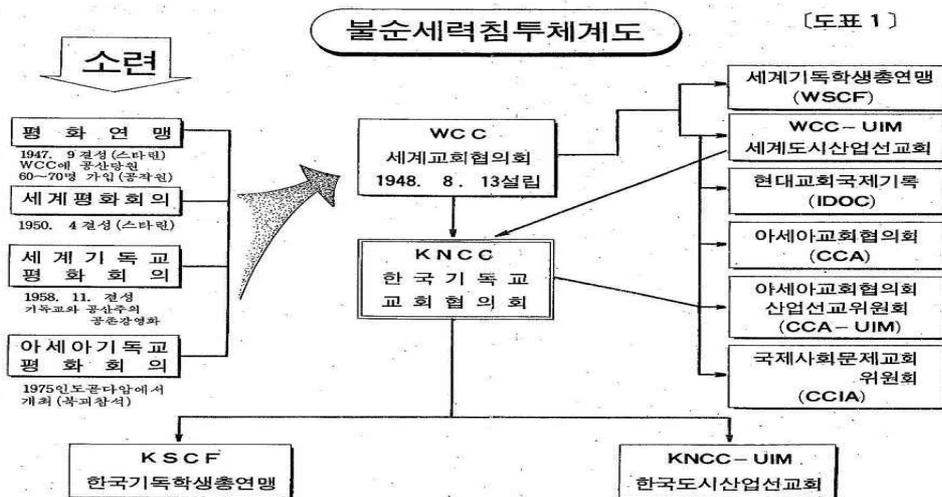


그림 2 : 불순세력침투체계도¹²⁾

9) 강원용, “에큐메니칼운동과 한국교회,” 「기독교사상」 1976.11, 37-39, 장숙경, 위의 책, 301에서 재인용.

10) 박병훈, 「공산주의 서방교회 침투와 한국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호헌총회, 1978), 2-3.

11) 박병훈, 「공산주의 서방교회 침투와 한국교회」, 33.

그는 이 소책자 발간에 맞추어 사진전을 열어 러시아정교회의 인사들의 사진에 KGB요원이라고 각주를 다는 한편 1987년에는 ‘한국기독교멸공협의회’를 통해 『안보우위 구국론 - 멸공후방안정 반공국가 안전조치 좌경의식화』라는 책을 발행하기도 하였다.

3. 언론의 가세와 노동계의 동조

위의 논리에 입각하여 산업선교에 대한 언론의 대대적인 공격이 진행되었다. 그 예를 들자면 1979년 8월 18일자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게재되었다.

그 조직과 수법을 벗긴다. 도시산업선교회의 정제. 재야와 손잡고 반체제운동. 외세 지원속 계급투쟁 고취. 배후엔 불순세력, 철저한 점조직.

… 단순히 근로자들이 그들의 권익을 옹호한다거나 농민들이 그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적정 가격을 보상받기 위한 순수한 활동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 배후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불순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소위 말하는 해방신학자들이다. 그들은 외세의 지원을 받아서 1단계로는 유신체제를 넘어뜨리고 2단계로는 자본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그들이 바라는 사회주의 사회를 만들 계획인 것이다.¹³⁾

경향신문은 1980년대 후반까지도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한 비판적 기사를 집중적으로 쏟아내고 있었으며, 여기에 조선일보, KBS, MBC등 유력한 언론 및 방송사들이 이와 같은 움직임을 보였다.¹⁴⁾ 한국노동총연맹 역시 1973년부터 도시산업선교회와 입장이 다름을 분명히 하며 대립해 오다가 1974년 성명서를 발표, 도시산업선교회를 ‘외부세력’으로 지칭하며 비난하였다.

일부 종교인의 직분을 망각한 노동조직 침해행위를 엄중경고하면서 만일 그들이 분별없는 책동을 계속할 때에는 우리의 조직력을 총동원하여 이를 분쇄할 노총의 결의를 내외에 밝힌다. 그 동안 한국도시산업선교위원회를 비롯한 일부 종교인들은 종교인으로서의 신성한 직분을 망각하고 우리 노동조직에 침투하여 선량한 조합원을 선동하고 책동함으로써 불법적인 탈선행위와 노사분교 및 조직의 분열을 조성시키는 등 여러 가지 혼란과 부작용의 불씨를 뿌려주고 있다. … 5. 우리 각급 조직은 일체의 부조리를 제거하고 조직을 점검, 재정비하는 동시에 미조직분야를 완전히 흡수하여 모든 불순세력의 조직침투를 분쇄할 완벽한 태세를 갖춘다.¹⁵⁾

12) 박병훈, 「공산주의 서방교회 침투와 한국교회」, 9.

13) 경향신문, 1979. 8. 18일자.

14) 각주를 달고, 달고, 또 달다가 너무 많아서 포기.

15)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배상호 외 17개 산별노동위원장 10개 시도 노조협의회회장, “성명서” 1974. 1. 19.

1978년 2월 28일 한국노총회관에서는 ‘외부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조직된 ‘조직행동대’의 교육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노총위원장인 정동호는 “일부 불순분자들이 종교를 가장해 가지고 노동조합 조직에 침투하여 조직분규를 야기하고 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종교와 싸워야 한다. 월남 전쟁도 종교 때문에 패망했다. 몇 백만의 조직의 힘으로써 우리는 행동요원으로서 그들과 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⁶⁾

1979년 8월 14일 전국섬유노조 위원장 김영태¹⁷⁾는 MBC의 보도특집프로에 출연하여 “도시산업선교회의 활동은 순수한 선교활동이 아니며 공산당이라 할 수는 없으나 공산당과 유사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으며, 도시산업선교회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¹⁸⁾ 이 발언이 다시 다양한 언론사를 통해 재생산되었음을 당연한 수순이었다.¹⁹⁾ 그는 1978년 3월 6일 섬유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산업선교는 국제 빨갱이 단체이며, 동일방직 현 집행부는 그 새끼다, WCC는 세계적인 공산당 조직이다”라고 주장하며 섬유노조가 이를 분쇄하기 위해 단결하자고 호소하기도 하였다.²⁰⁾

도시산업선교회와 연대되어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다른 노동자들의 비난과 협박도 이어졌다. 1977년 구미에서 활동한 고애신 전도사에 대한 중화실업 노동자들의 편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²¹⁾ 1978년 7월 11일의 윤성방적주식회사 노동자들의 편지 또한 주목할 만하다.

우리가 아는 기독교는 개인의 믿음을 통해 개인 구원에 이르고 ... 기독교의 의를 빙자한 노동투쟁으로 사회구원 운운은 전혀 비성경적인 논리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당신들의 계급투쟁적 노동투쟁이 들여다보이는 가면적 기독교 선교활동을 경원합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전하는 용공적 사상의 의용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진리의 참된 종교를 얼마든지 뺏을 수 있는 기회와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당신들은 이곳을 떠나가 주기를 부탁하며 하나님의 준귀함과 크리스트의 귀한 보혈이 그대들로 인하여 욱되지

16) 임송자,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노총의 갈등대립,” 『사림』 35호 (2010), 322.

17) “김영태는 대한민국 검찰부장 김두환의 최측근으로서 대한민국의 별동대장으로 좌익세력 제거에 앞장서온 인물이었다. ... 이러한 인물이 한국노총 위원장에 선출되었다는 것은 이후 한국노총이 도시산업선교회에 대하여 어떠한 억압과 폭력을 행사할지는 명약관화하였다. 김영태는 위원장에 선출된 직후 “국가가 우선이다. 국가 없이 노동조합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국민총화에 역행하는 불순세력은 행동으로 분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롯한 교회조직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선포한 것이었다.” 임송자,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노총의 갈등대립,” 『사림』 35호 (2010), 339.

18) 임송자, “1970년대 도시산업선교회와 한국노총의 갈등대립,” 337.

19) 경향신문, “김 섬유노조위원장, MBC-TV서 “도시산업 정체 알아야, 순수한 선교활동 안해.” ; 조선일보, “섬유노조위원장, 도시산업선교회는 순수종교활동 안해,” 1979년 8월 15일자.

20)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산업선교를 왜 문제시하는가?』 (서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78), 83.

21) “허울 좋은 간판을 앞세우고 암여우가 교활한 사냥을 하듯 선량한 근로청소년들을 감언이설로 설득 유혹하는 너의 악랄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 친우들을 다같이 분노를 참을 길 없다. 우리는 벌써 타지방에서 너와 같은 사회의 암적인 존재들의 조직활동에 대하여 솔한 선량한 사람을 괴롭혀 왔고 현재도 계속 중이며 이제는 최후 발악적인 너희들의 행위도 잘 듣고 있어 너희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부화뇌동하여 유신총화단결을 해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아 보는 즉시 우리 구미지역사회서 떠나주기 바라며 만약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너를 추방할 것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산업선교25주년기념대회,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서울: 풀빛, 1984), 460.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²²⁾

또한 이전에 도시산업선교회와 협력하여 반도상사에 노조를 설립한 적이 있던 한순임은 스스로 지부장에서 물러났으며 회사에서 어떠한 대가를 받은 적 없이²³⁾ 도시산업선교회를 비난하면서 “현 동일방직 지부는 빨갱이 단체와 연결되어있다”²⁴⁾고 주장하였다.

4. 생산자와 후일세력의 문제 : 홍지영의 경우

홍지영은 1976년부터 198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용공시비를 일으키는 책과 글을 발표한 사람이다. 그는 『한국기독교와 공산주의』의 공동집필자로 세간에 모습을 드러내어 1977년 1월 『정치신학의 논리와 행태』를 저술했으며 1977년 4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는 「기독신보」에 20회에 걸쳐 “기독교에 침투하는 공산주의 전략전술 비판”을 연재하였다. 이어 1977년 10월 15일부터 1978년 3월까지 18회에 걸쳐 “산업선교란 무엇인가”를 연재하였다. 아울러 1977년 12월에는 기독교사조사를 통해 “공산주의와 대결하는 신앙인의 교양지” 「현대사조」를 창간하였고 산업선교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산업선교는 무엇인가』, 『이것이 산업선교다』, 『산업선교는 왜 문제시 되는가』를 연이어 출판했다. 그의 책들은 어용노조와 정부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런 상황을 볼 때 홍지영은 진보적 개신교 진영에 대한 용공시비의 첨병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홍지영은 과연 누구인가? 지금까지 그에 대해 알려진 바는 별로 없다. 그는 홍지영(한국종교문제연구회 회장), 홍성문(내외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성철(현대사조 주간) 등의 필명을 사용하였으며 1978년 4월에는 전 건국대학교 교수, 이화여자대학교·단국대학 강사였다가 8월에는 국방대 교수였던 사람이다. 그에 대해 알려진 사실은 대부분 금란출판사에서 출판한 『정치신학의 논리와 행태』에서 스스로 자신을 소개한 글에 기초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그는 “14세 때 성경통신 신·구약을 다 떼고 철학과 사회과학을 공부하였으며 1940년대 초반 일본군대의 정보원 양성학교인 나가노학교에서 특수교육을 받으면서 공산주의의 이론을 알게 되었고, 일제가 중국대륙의 침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침략전략을 전공으로 가르치던 상해 동문대학에서 수학했다”, “목사의 장남이며 목사를 장인으로 모셨고, 신학박사인 처남도 있다”고 한다.²⁵⁾

삶과 공부의 폭이 너무나 넓어 자연스럽게 경건히 무릎을 꿇게 되지만 잠시 정신을 가다듬고 살펴보

2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산업선교25주년기념대회, 『1970년대 노동현장과 증언』 (서울: 풀빛, 1984), 461.

23) 김원, “1970년대 민주노조와 교회 단체: 도시산업선교회와 지오세 담론의 형성과 모순” 「산업노동연구」 제10권 제1호 (2004), 85.

24) 동일방직복직투쟁위원회, 『동일방직 노동조합운동사』 (서울: 돌베개, 1985), 95.

25) 홍지영, 『정치신학의 논리와 행태』(금란출판사, 1977), 4-5. 장숙경, 위익책, 295에서 재인용.

면 한 가지 특별히 주목되는 이력이 있다. 바로 나가노정보학교를 나왔다는 대목이다. 나가노정보학교는 일제가 태평양 전쟁 전에 정보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학교이다. 나가노학교 출신 한국인들은 한국의 정보기관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역시 1948년부터 육군본부 정보국 특별조사과 3과(일명 방첩대)를 지휘했던 김창룡과 1970년 12월부터 1973년 12월까지 중앙정보부장을 역임했던 이후락이다. 또한 1982년 단군 이래 최대 어음사기 사건으로 꼽히는 이철희·장영자 부부 사건의 이철희 역시 이 학교 출신으로 방첩부대장을 역임하였을 뿐 아니라 1970년대 중앙정보부에서 활동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나가노학교 출신인 홍지영 역시 중앙정보부를 비롯한 정부의 정보기관에서 활동하였으며 진보 기독교 진영을 공격하던 시기에도 중앙정보부와 강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란 추측을 할 수 있다. 인명진은 홍지영을 전 KCIA 직원으로 알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²⁶⁾ 말하자면 홍지영은 당대 최고의 정보조작기술자 중 한명이었다.

홍지영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기독교실업인회를 비롯한 한국교계의 인사들이었다. 「현대사조」의 발행인 겸 편집인은 국토통일원 장관을 지낸 유상근 장로였다. 또한 발행처 기독교사조사의 이사들은 “제1대 한국기독교실업인회 회장 김인득, 2대 회장인 한국판유리의 최태섭, 태창메리아쓰의 최창근, 서울기독교실업인회의 회장이자 한국기독교실업인회 부회장을 지낸 한국합금철의 서정한” 등으로 모두 기독교실업인회의 핵심 멤버들이었다. “이들은 교단을 막론하고 자신들의 재력으로 「현대사조」를 적극 후원하였으며 대량 구입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교회와 산업체에 뿌리는 역할을 담당했다.”²⁷⁾ 한국교계의 굼직한 보수 성향의 지도자들 역시 이 잡지에 글을 기고하고 광고를 게재하기도 하였다. 산업선교에 대한 용공시비를 연구한 장숙경은 홍지영의 책은 “보이지 않는 손, 그러나 너무나 잘 보이는 목적으로 인해 유신정권과 개신교 보수세력이 ‘함께’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날조한 내용의 책자라는 추측”을 하고 있다.²⁸⁾

5. 나가며

이상을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은 그림이 그려진다. 1960년대부터 국가조찬기도회를 주도하며 박정희 정권과 보수 기독교의 연대를 이끌어낸 기독교실업인회는 도시산업선교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자신들의 이익과 산업선교회의 활동이 명백하게 대치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정부와 협력하였다. 그리고 정보 조작에 능숙한 정부 측 인사를 영입하여 그동안 교계 내에서 유폐되던 진보적 기독교 진영에 대한 용공시비를 섬세하게 가다듬고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 조직과 어용노조를 동원하여 이들의 주장을 사회 말단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도움과 동시에 산업

26) 장숙경, 위의책, 295의 각주 686.

27) 장숙경, 위의책, 298.

28) 장숙경, 위의책, 301.

선교에 대한 사법적 처리를 여러차례 시도하였다. 그 결과 1970년대 말에는 노동자들마저 산업선교를 불온시하게 되었으며 1980년대 중반 이후에는 산업선교 자체가 쇠퇴하게 되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믿게 만드는 일은 간단하지가 않다. 사실이 아닌 것을 믿게 만드는 일은 사실인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보다 몇 십 배는 더 어려운 일이다. 쉽게 우매한 대중이라는 말이 사용되지만 사람들은 생각보다 명철하지 않다. 특히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할 때는 이상하게 주변 사람들이 모조리 지혜의 (여)신이 되어 있는 법이다. 따라서 특별히 욕망이 판단을 흐리게 한 것도 아닌데 많은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을 때는 그 허구의 정보가 전문가에 의해 절묘하게 가공되어 있지 않은지 의심해 보아야 한다.

개인적 경험을 고백하자면 나는 대학원 시절 산업선교에 대한 용공시비 발제를 맡게 된 후배가 자료를 구하지 못해 찢찢 매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 박병훈의 소책자를 복사하여 후배에게 건내며 ‘용공시비 내용의 대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니 참고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후배의 발제일, ‘여기 NCKK가 빨갱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며 소책자를 맹렬히 흔들며 후배를 발견할 수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후배에게 다가가 사료의 성격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의 눈은 이미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 자의 것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덥석 잡더니 ‘선배 덕에 한국교회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았다’며 감사를 표하곤 ‘깨어 기도하기 위해’ 성큼성큼 떠나버렸다. 나는 떠나는 그의 등에 대고 “야, 야, 깨어 있지만! 기도하지만!”라고 허망하게 외칠 뿐이었다. 잘 만들어진 가짜 정보는 40년이 지나서도 위력을 발휘하기도 한다. 지금의 상황을 그저 혀나 차며 지켜볼 수 없는 이유이다. [11]

가짜뉴스, 그리고 극우개신교

변상욱 (CBS 대기자)

[참고자료 1]

가짜뉴스 리터러시

〈가짜 뉴스란 무엇일까?〉

가짜 뉴스를 왜곡보도나 오보와 명확히 구분하기란 쉽지 않다. 학문적 정의를 구하기 이전에 현장에서 체득한 바로는 기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사실과 달리 왜곡하려고 마음먹고 밀고 나간 뉴스가 ‘가짜뉴스’, 사실에 입각해 쓰다가 비틀거나 외압에 의해 변형된 걸 ‘왜곡 뉴스’, 취재의 부실과 착오에 의해 사실과 달리 작성된 걸 ‘오보’라고 통상 부르고 있다.

〈가짜 뉴스는 왜 생길까?〉

첫째는 기사 생산의 패턴이다. 특히 수사 사건의 경우 검찰, 경찰이 처음부터 누가 범인인지 심증을 갖고 증거를 찾는 것과 흡사하다. 경찰은 성급히 범인을 잡으려 무리한 수사를 하고 언론들은 사건의 진실과 결론을 추정과 추론에 의해 만들어두고 속보경쟁에 나서기 일쑤다. 그러다 보니 오보와 가짜뉴스의 토양이 만들어진다. 1988년 공업용 소기름을 라면에 썼다는 혐의로 라면회사 직원들이 구속·기소되었다가 9년 후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끝나버린 우지파동 사건, 2006년 중국산 불량 무말랭이로 쓰레기 처리해야하나 만두소로 썼다는 쓰레기 만두 파동. 〈쓰레기 만두〉라는 제목에서 프레임이 이미 결정된 사건이고 만두회사 사장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2017년 봄 대왕 카스테라 사건, 2017년 가을 240번 버스 사건 역시 지레짐작으로 갑질한 범인을 설정하고 덤벼들어 특종경쟁을 한 언론사들이 오보 내지는 왜곡보도로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건들이다.

둘째로 정치에서의 가짜뉴스는 설정된 심증이나 추론 때문이 아니라 정파적 편향과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선거전에서 어느 후보나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게 끌여가고 싶은 목적이 먼저 존재하고 여기에 기사내용과 제목을 적당히 맞추는 것이 흔히 나타나는 사례이다. 특정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면 “거침없는 상승”, “맹추격”이라고 쓰고 다른 경쟁후보가 지지율이 오를 때 “소폭 반등”, 떨어지면 “날개 없는 추락”이라고 쓰는 방식이다. 또는 그래픽으로 지지율 증감을 표현할 때 지지율의 약간 감소를 그래프 간격을 크게 잡아 큰 기울기로 그리고, 지지하는 다른 경쟁후보의 지지율 감소는 완만하게 표현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셋째, 독자도 가짜 뉴스를 향해 폭주한다는 점이다. 사건 뉴스를 접하면서 범인을 빨리 알고 싶고 누구를 찍을 건지 빨리 정하고 싶어 독자와 시청자가 서두를 경우 가짜 뉴스의 등장을 부추기게 된다. 심리학에서도 인간은 복잡한 사고와 끈질긴 검토를 피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조급한 심리에 부응하기 위해 언론도 성급히 ‘아니면 말고 식의 가짜뉴스’를 내보낸다.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방법은?〉

1. 그래도 이름이 확실한 언론사의 기사, 취재 · 보도하는 기자의 이름이 확실히 명시된 기사를 골라 읽는 것은 나름 괜찮은 방법이다. 다만 해당 언론사가 진보, 보수 또는 개혁이나 수구 중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는 독자가 간파하고 있어야 한다. 또 해당 언론사가 어떤 방식으로 여론을 유도해 왔는지 그 맥락을 짚고 있어야 한다. 큰 언론사는 표가 나지 않게 크게 속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19대 대통령 선거전에 돌입하면서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입에 오르내리다 반기문 후보 대세론이 등장하고, 다시 황교안 총리 대안론이 등장한다면 이것은 보수 정권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언론사들이 후보를 바꿔가며 간을 보느라 여론을 살피려 일부러 띄운 것이지 정말 대세론이 등장한 건 아니었다.
2. 가능한 같은 내용의 기사를 서로 다른 관점에 서 있는 2개 이상의 언론사 기사를 놓고 비교하는 것이 최선이다. 비교해 읽고 어떤 점이 다른지 파악했다면 일정 시간이 지나 어느 쪽이 거짓말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것이 ‘뉴스 리터러시’ 즉 ‘뉴스 문해력’의 내공을 키우는 최선의 방법이다. 직업 기자가 가짜뉴스에 덜 속는 것은 일상 속에서 꾸준히 서로 다른 기사를 비교하고 후에 드러난 결과로 판가름하며 익혔기 때문이다.
3. 내용이 딱딱 맞아 떨어지도록 사진과 그래픽이 배치되어 있어도 의심해야 한다. 이미지로 독자를 몰

아가는 가짜 기사도 있다. 쉬운 예는 TV뉴스이다. 노동조합 파업 기사가 있는데 해당 기사 앞에 북한 핵 미사일 소식을 배치할 때와 생활고로 자살한 가장의 소식이 배치되는 건 한참 다르다. 노동조합 파업이 곧장 나쁜 짓, 옳은 일로 구분지어질 수 있는 것이다.

4. 무언가를 비판하는 기사라면 비판의 근거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자.
5. 기사의 어미를 유심히 살피자. “~했다, ~이다”면 믿을 만하지만 그 외 “~라고 한다”, “~알려졌다”, “~전해지고 있다”, “~할 가능성이 있다”, “~유력하다” 등은 반쯤 접고 읽거나 의심해야 한다.
6. 취재 기자가 주인공을 만나 쓴 것인지 현장에 가보고 쓴 것인지 확인하는 습관도 필요하다. 사실 그렇게 직접 취재한 기사는 별로 없다.
7. 때로는 기사의 맨 말미에 등장하는 ‘전문가의 소수의견’이 그 기사의 핵심인 경우가 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결코 적지 않으니 끝까지 살펴 읽는 것이 좋다.

이상의 방법들은 1차원적인 가짜 뉴스 식별법이다. 조금 더 입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1. 첫째는 돈 또는 여론의 흐름에서 누가 이득을 취하느냐이다. 해당 기사의 내용대로라면 누구에게 이득이 돌아가는 지를 분석해 보면 가짜 뉴스가 더 쉽게 보인다. 대표적인 최근의 사례가 원전과 탈핵을 둘러싼 찬반 기사들이다. 원전 강행을 찬성하는 기사인데 내용 속에 인터뷰를 한 전문가가 모두 원전 찬성론자라면 해당 기사의 신뢰도는 떨어진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뉴스를 감시하는 미디어 비평 전문지 또는 해당 분야의 NGO 홈페이지에 들어가 해당 기사에 대한 평이나 관련된 분석들을 읽어보는 방법이다. 한국기자협회보, 미디어오늘, 미디어스, 팩트체크 등이 그런 매체들이다.
3. 또 해당 언론사의 노동조합이 부정기적으로 내놓는 공정방송 보고서나 노보, 언론시민단체의 모니터 보고서를 활용할 수도 있다.
4. 새로운 기사가 크게 보도되고 번지면 그로인해 직전에 사회적 반향이 커지다가 묻혀버린 뉴스가 있는지 찾아보자. 이것이 프레임 전환에 속지 않는 비결이다. 그렇다고 연예인이 크게 기사화되면 뭐든지 정치적 음모에 의한 것이라고 몰아가는 건 피하자.

〈가짜 뉴스와 SNS〉

가짜뉴스는 SNS와 관련된 두 가지 현상에 의해 증폭된다.

첫째는 에코체임버 현상이다. SNS에서 자신의 글과 의견이 확산되고 반응이 있으면 동굴 속에서 자기 목소리가 울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같은 성향의 사람들만 모이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편견은 상식이 되고 통찰이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로 가상의 공동체가 이뤄지는데 그 공동체는 정파적 대결이 치열해지면서 거리로 진출하고 지원세력을 만나 조직화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피니언 리더도 등장한다. 흔히 ‘그레이트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다. 또 그들의 언행은 뉴스가 된다. 여기에 동조하며 그레이트 아마추어를 동경하는 일부는 자발적으로 가짜 뉴스 생산에 뛰어들기도 한다.

그 다음은 SNS 알고리즘을 통해 필터 버블에 갇히는 문제이다. 이것은 과거 특정신문만 배달시켜 보는 사람이 갇히게 되는 편견의 감방과 비슷하다. SNS의 맞춤형 필터링 서비스가 사용자의 과거 검색 이력을 살펴 해당 유형의 정보만을 받아보게 만들으로써 사용자들은 자신의 관점에 반하는 정보로부터 격리되어버린다. 자신만의 이념적 거품에 갇혀 버리는 것이다. 이들은 가짜뉴스의 애독자로서 가짜뉴스의 생성과 확산에 기여하게 된다. SNS상에 떠도는 가짜뉴스를 적발하기 위해 팩트체크 기관을 따로 만들자는 의견도 나오지만 언론사들마저 팩트체크를 저버리는 시대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별도의 기관을 만든다는 건 요원한 일이다. 순식간에 SNS를 통해 전 세계에 전파되는데 인원과 비용을 들여 가짜뉴스를 확인한다 해도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기독교계의 가짜뉴스〉

2017년 한국 교회도 가짜뉴스에 시달렸다. 가장 크고 비중이 컸던 것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스런 기사들과 동성애가 곧 전국에 번지면서 젊은이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 거라는 포비아성 기사들이다. 언론사의 자발적인 가짜 기사라기보다 교계의 특정세력들이 가짜 정보를 전파시킨 뒤 교계언론에게 교회 수호를 위해 참여하라고 종용하는 형태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 한국 교회의 침체와 위기를 벗어나고자 희생양을 끌어들이겠다는 분석이 가능한데 언론은 그런 분석을 토대로 신중히 접근하지도 않고 그런 분석을 기사 말미에 실어 균형감을 갖도록 배려하지도 않는다.

무슬림 공포를 예로 들어보자. 계속해 번지고 있는 이슬람 관련 정보와 기사의 내용에는 ‘이슬람 선교사 2만 명이 국내로 들어와 암약하면서 한국을 점령하려 한다는 것과 8단계 전략을 세워 침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내 이슬람 신자가 30만 명 수준이고 해마다 무슬림과 결혼하는 한국 여성이 2천5백 명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국내로 침투한 이슬람은 좌파 세력과 결탁해 활동한다는 내용이 덧붙는다. 이슬람 세력이 5%에 육박하면 자생 테러단체들이 생긴다는 공포스런 이야기도 곁들여진다. 발표내

용이나 옮겨 쓴 기사를 잘 읽어보면 발표자가 오랜 세월 추적조사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고 한다’는 내용이 많다. 이런 정보를 배경으로 인터넷 등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각종 범죄를 저지른다며 외국인 혐오로까지 번져나갔다.

2016년, 2017년에 번진 이 내용은 사실 2007~2008년 무렵에 이미 한차례 휩쓸고 지나갔던 것들이다. 한겨레신문 2009년 1월 22일자 <이슬람 할퀴는 종교적 색안경> 기사를 참고하면 좋다. 한겨레신문의 취재내용은 국내 이슬람 신자 규모는 일부 기독교세력이 주장하는 30만 명이 아니고 14만 명 선이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 15만 명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7년 6월 15일 서울경제신문 <국내 이슬람 인구 2023년에 100만 명 넘을까>라는 기사를 참조해 비교해 읽어보자). 8년 사이에 1만 정도 늘어난 숫자인데 앞으로 5년 안에 100만 명으로 늘어난다는 건 믿기 어렵다. 2009년 한겨레신문은 국내 무슬림 가운데 순수 한국인이 3만5천 여 명이라고 취재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나 다시 취재한 서울경제신문은 4만 명 정도로 잡는데 중동건설 때 공사현장에서 일하기 위해 억지춘향으로 무슬림신자가 되겠다고 무늬만 무슬림으로 등록한 허수가 많아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적다고 판단한다. 2009년 당시 이슬람중앙회는 선교사가 2만 명이라는 기독교 일부의 주장에 대해 15명 정도라고 밝혔다. 이슬람세력이 완벽히 숫자를 속이며 위장하고 있는 것일까? 또 국제결혼을 수단으로 해 한국을 접수한다고 하지만 전국 도시와 농어촌에 흩어져 어렵게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 등 이슬람권 국가로부터 결혼을 통해 입국한 여러 나라 무슬림 여성들이 국정원 댓글요원들처럼 일사분란하게 훈련받아 한국 점령공작을 편다는 건 황당한 이야기에 가깝다.

외국인 범죄 통계도 마찬가지이다. 외국인 전체 숫자가 늘어나면 그에 따라 범죄건수도 늘어난다. 그러나 한국인 범죄율이 4%일 때 외국인 범죄율은 1.3% 수준이었다. 이것은 2006년 통계이다. 이후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율도 빠르게 상승했다. 그래도 최근 외국인 범죄율은 한국인 범죄율의 40% 수준이다. 그리고 외국인 범죄는 출입국관리법, 교통관련법 위반이 대부분이고 흉악범죄율은 상당히 낮다. 특히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 숫자를 정부는 강하게 통제·관리해 쉽게 늘지도 않고 무슬림 중 상당수도 할랄 등 이슬람전통을 지키기 힘든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한다.

현장을 지켜본 판단으로 기독교 보수우익 진영의 좌파, 이슬람, 동성애 3대 사회악 척결운동은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국 기독교는 장로 대통령으로는 확실한 정치적 보장이 어렵다고 보고 ‘기독교정당’ 운동을 시작했다. 이 때 ‘개신교’ 진영의 대중동원을 눈 여겨 본 보수우익세력은 정권이 보수개혁(김영삼)에서 진보개혁(김대중)으로 옮겨지고 진보정권이 한 번 더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독교 보수세력과의 연대를 구상했다. 극우정치세력이 기독교 지도자들을 만나 좌파로부터 나라를

구할 힘은 보수우익 기독교의 힘뿐이라며 설득해 동맹을 맺은 것이다. “그래도 한국에는 잘 조직된 거대한 반공보루가 있습니다. 인구의 약 30%나 되는 개신교 세력과 약 70만 명을 헤아리는 군대가 그것입니다”(조갑제 닷컴 2000년 6월 1일). 이후 조용기, 김장환, 최성규, 곽선희, 김진홍, 길자연 목사 등이 줄줄이 월간조선에 인터뷰를 신거나 조갑제 씨 등과 만났다. 이후 이 보수 기독교계의 정교합치 세력은 좌파척결, 이슬람 타도, 동성애 박멸이라는 격한 구호를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제시하며 움직이고 있다고 본다. 동성애를 좌파 전교조와 연계시키고 대법원장 후보나 크리스천인 헌법재판소장 후보까지도 좌파, 동성애 옹호의 죄목을 달아 비판하는 양태는 정권회복을 바라는 정치적 우파의 속내가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 세력의 확장을 꾀하는 보수 기독교진영이 권력 제 4위의 크리스천 헌법재판소장 후보마저 깎아 내릴 이유는 없는 것이다.

이런 맥락을 살피며 언론으로서의 균형과 감시기능을 수행했는지 기독교언론은 스스로를 평가해야 한다. 가짜 뉴스를 내놓지 않았다 해도 본질을 피해간 뉴스와 황당하지만 주장하는 대로 받아쓰는 발표저널리즘도 “미필적 가짜”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근원적 해결은?>

그럼 기성언론의 가짜 기사 내지는 가짜 비슷한 기사들, 그리고 SNS를 통한 전파는 어찌 할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진실 보도에서 기성 언론이 아닌 다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본다. 진실은 어떤 특출한 전문가나 독자적인 뉴스기관에 의해 결정되는 가치가 아니다. 그렇다면 정보가 집단적으로 공유되어 의견과 주장들이 넘쳐나는 ‘사회적 공유’ 한가운데서 진실을 찾아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기사를 내보낸 뒤 기사의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부족한 것을 보완함에 있어 독자와 시청자를 파트너로 받아들이는 개방성의 문제다. 독자는 기사에 댓글만 다는 것이 아니라 기사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고쳐야 한다고 제시하고 그 타당성을 언론사와 다른 독자들이 공개된 장에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기사를 쓴 기자와 데스크, 이후 참여한 시민 독자가 그 기사의 공동작성자로 인정받아야 하고 책임도 공유해야 한다. 시민을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로 받아들여 보도과정의 한 축으로 참여시키는 시스템을 상상해 본다. 저널리즘과 저널리스트가 독자와 시청자에게 편딩과 정보만 요구하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오만한 구체제에 머물고 있다는 반증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떠올려본다. 저널리스트가 진실을 최상의 가치로 놓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진실에 접근하도록 돕는 사람이

데스크나 동료 기자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파트너로 삼는 것이 부적절하지만은 않아 보인다. 국민에게 정직하고 진실하고자 한다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과 확인되지 않은 것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새로운 저널리즘의 형태가 아닐까?

〈가짜뉴스에 대항하는 힘〉

가짜뉴스에 대응하는 기자와 편집자라면 지금부터 뉴스제작 방식에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

첫째는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사례, 문제의 구조에 더 비중을 실어 가짜뉴스와 차별화해야 한다. 에피소드 중심이나 단편적 발언 중심의 정치보도 관행은 가짜뉴스의 토양이 된다.

둘째, 자신이 보고 들은 배경지식을 그대로 기사에 담아야 한다. 청와대 기자단이 번번이 실패한 점이 이것이다. 대통령이 어떤 의도와 어떤 과정을 통해 기자들을 불러 모았고 기자들은 청와대의 기자회견·브리핑 방식에 어떤 불만을 터뜨렸는지, 기자회견 후 기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청와대의 홍보 방식에 대한 비판을 있는 그대로만 전하면 되었다. 그런 내용이 기사에 그대로 담았다면 국민과 독자들이 청와대 기자단을 허수아비 병어리 기자들이라고 조소하는 불행을 피해갔을 것이다. 이런 현장에서의 디테일한 장면들은 현장에 가보지 않고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사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기자단의 이점이다. 그런데 청와대 기자단은 이런 콘텐츠를 마음속에 묻어두고 삭인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셋째, 뻔한 기사 형식에서 스스로 벗어나자. 선거전에서 누가 1등이고 격차가 어디까지 벌어졌나만 중요할까? 정치인들이 의도를 담아 사용하는 수수께끼 같은 수사적 언어들을 중계하는 게 그리 중요할까? 유권자의 이해와 관심에 초점을 맞춘 뉴스로 바꿔보자.

넷째, 기사 말미에 이 기사는 무엇 때문에 중요하고 왜 꼭 읽어야만 하는가 설명을 붙여보자. 데스크가 잘라버려도 기사는 첨부해 보자. 자신의 기사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스스로 다짐하고 확인할 수 있고 물어버리는 데스크에게 압박이 된다.

〈언론은 정말 진실을 위해 객관적일까?〉

사람들은 언론이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한다고 믿는다. 적어도 언론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접근하려

애쓰고는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도 대중이 언론에 대해 그런 허상을 갖도록 유도해왔다. 그 노력은 헛되지 않아 국민은 언론이 엉뚱한 기사를 내보내면 ‘오보’라 한다. 실수했다는 의미이다. 사심(私心) 가득한(?) 뉴스에도 ‘왜곡’이라고 한다. 정파나 이념에 의해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지금은 여기에 ‘가짜’가 추가되었다. 이리되면 자칫 저널리스트는 ‘기레기’가 아니라 반사회적 애물단지로 낙인찍힐 지도 모르겠다. 과한 표현일 수는 있으나 미국의 언론비평 저술에는 이미 1990년대에 저널리스트들을 겨냥해 “사람들의 허영심과 무지와 고독을 먹이로 삼는 일종의 사기꾼들”(자넷 멜컴, <The Journalist and the Murderer>)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였다.

‘가짜뉴스’는 ‘가짜 언론사’와 ‘가짜 기사’ 크게 둘로 나누어 접근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가짜 언론사는 언론사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버젓이 기사를 생산하는 집단. 또 언론사라 부르기도 민망한 존재인데 쏟아내는 기사마저 의도성 짙은 영터리 기사인 사이버 언론사의 문제다.

둘째는 가짜 언론사가 아닌 기성 언론이라 부를 매체에서 쏟아져 나오는 황당한 기사들이다. 불순한 의도에서 진실을 은폐하고 거짓을 퍼뜨리려는 기사들인데 실수나 왜곡일 뿐이라고 두둔하기가 다소 벅차 보이는 것들도 있다.

가짜 언론사, 가짜 기사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당연히 가짜 기사를 추적해 작성자와 발행인을 처벌하거나 언론사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다. 이때 기자나 발행인 개인을 개별 기사와 관련지어 처벌하는 것을 넘어 언론사까지 정부기관의 판단에 맡겨 처리하는 것은 타당한 걸까? 기자협회 등을 통한 자율정화의 방법은 없을까를 궁리해야 한다. 가짜뉴스를 걱정하는 독자와 시청자에게 협회에 등록된 신뢰할 만한 기성언론의 보도만 골라 접하라고 충고하려면 그런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참고자료2]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교회의 위기와 과제

1. 한국 사회의 정치변동과 한국 교회

(1) 민족민주주의와 한국 교회의 각성

1980년대 한국 교회와 현실정치의 접점으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말미암은 새로운 시대인식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대 중반 이전의 학생 민주화운동은 장기집권으로 돌입한 권위주의 정권의 퇴진, 직선제를 통한 민주화가 중심 주제였다. 그러나 광주민주화항쟁에서 미국이 〈신군부의 쿠데타와 정치세력화 vs 한국 민중의 민주화 요구〉 2가지를 놓고 고심하다 안정된 친미정권의 수립을 선택했다는 인식이 받아들여졌다.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도의적으로 한국의 민주화를 도와줄 거라는 기대가 강했으나 현실은 아니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이다. 학생 운동권은 미국 제국주의라는 개념을 새로이 마련해 민족주의와 민주화를 연결 지어 생각하기 시작했다.

결국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군사, 외교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민족적인 민주주의가 가능하고 내부적으로는 독재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민주화라고 보고 민족/민주 2개의 이념적 축을 갖기에 이르렀다. 이때까지는 선민주 후통일이 거의 일치된 이념이었다. 그러나 민주운동권은 군부세력이 반공을 내세워 수구보수 정치세력과 함께 권력을 장악하고 미국은 북한과 중공을 견제하고자 군부를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새로운 이념규정을 형성한 것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기독교 민주화운동도 사회과학적 현실 분석을 도입해 신앙고백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접목시킨다. 특히 CCC가 기초를 놓은 학원복음화 - 민족복음화 - 세계복음화의 선순환 구조 ... 민족복음화를 통해 한국은 기독교 국가이자 세계에 가장 강대한 통일민족 국가로 거듭나 세계의 기독교 중심국가가 된다는 비전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다. 기독교 학생운동의 진보 진영은 신군부의 억압과 광주 학살 등에 대해 회개도 저항도 관심도 없는 민족복음화 비전에 전혀 동의하지 않고 오히려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수십만, 100만의 군중집회가 가능한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보/보수의 양분이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보수 기독교학생운동 진영에서도 정교분리가 복음적인가? 과연 침묵은 복음적인가? 라는 물음을 던지며 교회의 의문을 제기했고 훗날 정체성 논쟁으로 번졌다. 정치적 상황을 복음으로 살펴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리로 복음의 기치 아래 책임과 임무를 모색하자는 로잔선언은 설득력을 얻으며 보수기독교학생 진영은 보수기독교운동과 개혁적 복음주의운동으로 나뉘게 된다. 복음주의 기독교학생운동은 한국 교회의 갱신과 한국 사회변혁을 과제로 학생 복음운동을 펴고자 아학이나 탁아소 등 현장운동에 뛰어들었으나 보수 기독교계에 운동권이 침투한다고 본 정보기관에 의해 체제전복 및 사회주의 건설운동으로 조작 당해 이적단체로 규정되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처벌받으며 와해되었다. 1987년 보수진영 기독교학생의 공정선거감시운동, 민주정부 수립운동 등과 이후의 복음주의 청년운동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기독교운동권의 진보진영은 서울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세력은 청년대학생 민주화운동의 핵심 세력쪽으로 기울어 현실 정치투쟁에 뛰어들었고 새문안교회를 중심으로 기독교운동세력은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더 뚜렷이 해야 한다는 쪽으로 균형을 잡으려 해 이것 역시 기독교민주화운동권 내에서 정체성 논쟁으로 번졌다. 그러나 1987년 전두환 정권에 맞선 직선제 쟁취 민주화 운동이 정점에 이르면서 진보진영 기독교학생 운동의 이념적 차이는 별 의미가 없어지고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의 흐름에 하나로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1987년 기독교학생공정선거감시단을 결성해 선거감시에 나선다.

민족문제에 대한 새로운 각성은 민주화 이후에는 다양한 통일운동으로 분출돼 나오기 시작해 1988년 2월 NCC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선언”이 발표된다. 통일에 대한 신학적 성찰과 신앙적 결단은 시대의 선교적 과제이고 민중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분단은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교회 통일선언은 한국 사회 전체에 통일논의가 구체적으로 번지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의미를 더 확대해 보자면 정치권력이 독점하고 관변학자들이 꺾맞추던 통일논의를 시민사회 속으로 데리고 나오는 역할을 맡았다.

(2) 역대 정권 별 한국 기독교계의 대응

1987년 대통령선거는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종교계의 자부심과 노태우, 김대중, 김영삼 3 후보가 불교, 가톨릭, 개신교로 종교적 배경이 각각 다른 점이 작용해 치열한 종파 간 경쟁을 불러일으켰다.

- 1) 조계종 총무원, 불교종단협의회가 노태우 후보 지지를 공식화하고
- 2) 개신교는 28개 교단과 소속 목회자들이 대거 김영삼 후보 공개 지지.
- 3) 가톨릭은 주교회의가 정치참여 과열을 우려해 한국천주교회의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다고 밝혔으나 민주화 참여세력을 중심으로 김대중 후보 지지운동이 벌어짐.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개신교 진영이 김대중, 김영삼 두 후보 지지로 나뉘며 둘로 쪼개져 버린 것. 같은 민주화 운동권이라 해도 진보성향이 강한 쪽(기장, 호남 중심)이 김대중 후보 쪽으로, 덜한 쪽과 중도 쪽이 김영삼 후보 쪽으로 규합되었고 그 후유증은 상당히 오래 한국 교회를 힘들게 했다. 기독교 진보 진영 쪽이 김영삼, 김대중 지지로 나뉘어 각축을 벌이기는 했지만 진보진영 전체로서는 세력을 확장했고 주도권을 잡아나가는 과정이었다. 이에 따라 기독교 보수진영은 그동안 반공과 친미의 패러다임이 깨져나가는 데다 세가 약해지자 자체 결속을 강화하기 시작했고 개신교는 보수와 진보로 더욱 뚜렷이 양분되기 시작했다.

특히 1988년 민족평화통일 선언으로 자주, 평화, 민족 외에 민중참여 인도주의 원칙, 군비축소, 상호 불가침선언, 한반도 비핵화, 외국군대 점진 철수 등 한국 교회 통일운동의 성격이 획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자 보수 개신교 진영은 북한에 이용당할 우려가 있고 주한미군 철수는 결코 안 된다고 제동을 걸었다. 결국 보수 진영은 1989년 12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를 출범시켜 보수진영의 결속과 단결을 모색했다. 한경직, 조향록, 지원상, 정진경, 강원룡 등이 시작을 주도했으며 월남 반공기독교세력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주로 구국기도회, 폭력시위 반대 등으로 반공과 국가주의를 강조했다. 이로부터 한기총과 교회협의회는 보수 진보의 양대 연합기구로서 사회적 이슈에서 대립을 벌였고 노태우 대통령이 불교도였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보수진영과 노태우 정권은 큰 무리 없이 관계를 유지해 나갔다.

1992년 김영삼 대통령이 선거전에 출마하면서 '나라사랑협의회'라는 총현교회 주도의 김영삼 지원 조직이 생겨났고 이 협의회는 보수 개신교 진영의 뒷받침 하에 전국 네트워크를 갖추고 교회를 무대로 본격적인 세력 동원전을 펼쳤다. 한경직, 김창인, 조용기, 박조준, 곽선희, 김선도, 김홍도, 김윤식, 김장환, 강원룡 등 개신교 지도자들이 대거 지원했고 이 시기에 대형교회들과 교회연합기구들은 정교분리 이념을 내려놓고 과감히 정파를 지지하는 새로운 양상을 보였다. 한기총이라는 연합기구가 대형교회의 보수적 성향을 한데 묶어내는 역할 감당했다.

한기총과 대형교회는 이후 정치적 행보를 거듭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에는 강력한 비판세력으로 행동했고 보수를 넘어 수구화의 색깔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김영삼 - 김대중 -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며 개신교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전성시대를 누렸다 할 수 있다. 3~5만 명 이상 출석하는 대형교회들이 줄줄이 등장해 세계적으로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를 이뤄냈다. 대형교회들은 개신교 대통령, 장관, 지자체장들과 밀착하며 1. 고급정보 2. 자금력 3. 문제해결 능력 4. 법적 대응력 등을 두루 갖춘 거대 조직으로 발전해 갔고 이들 간의 경쟁과 연합도 확대되어 갔다.

대통령이 개신교 장로 또는 가톨릭 신도라 해서 기독교편향 정책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었다. 현실적으로 대통령은 여러 세력을 정치적으로 컨트롤하며 정권을 유지해야하는 입장이어서 특정 종교 편향을 크게 내보이지 못한다. 오히려 대통령이 개신교 장로임을 의식한 하부 권력층이나 지역 국회의원들, 일선 관공서 현장에서 종교편향이 발생하는 예가 많았다. 김영삼 대통령도 최고 지도자로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유지했으나 역시 비서관/장차관 인사에서는 기독교 인사들이 대거 영입됐고 청와대 예배도 실시되었다.

김대중 대통령 정권이 시작되면서 보수 개신교와 정권 사이에 갈등 기류가 형성됐다. 배경으로는 진보 교단 일부 세력이 김대중, 김영삼 양 김 씨의 세력 다툼에서 김대중 쪽을 지지한 뒤 김영삼 정권에서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가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정부 기구와 당에서 활동을 본격화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기독교를 대하는 시각 자체가 진보적으로 변화했다. (김상근, 이재정, 김성재 등)

이에 따라 보수 기독교계의 위기감이 급격히 커졌다. 이승만 - 박정희 - 전두환 - 노태우 - 김영삼 으로 이어지던 개신교 보수진영의 상대적 우월이 역전의 기미를 보이자 보수 개신교는 좌파정권으로 몰며 정권과 대척점에 서기 시작했다. 특히 좌파정권으로 몰아간 데는 김대중 정부가 펼친 햇볕 정책이 보수 기독교계의 반공이라는 이념적 기반을 뒤엎어 버린 것도 이유로 작용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대중 정권 때 언론 자유가 향상되며 개혁진영의 신문과 지상파방송 등은 진보개혁적 시대분위기에 역행하는 한국 대형 보수교회에 비판적 시각을 세우며 대형 교회 비리를 다루기 시작했다.

- 1998 MBC 시사매거진 2580 - 금란교회 김홍도 횡령 및 불륜 비리.
- 1999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정명석의 JMS
MBC 피디수첩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 2000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할렐루야 기도원 비리
MBC 피디수첩 대형교회 비리와 세습 (광림, 여의도 순복음)
- 2003년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구속

2003년 위기의식을 느낀 보수 기독교계의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시작되었다. (노무현 정권 끝날 때까지 18회 실시). 이에 대항할 세력으로 대척점에 서 있던 NCCK는 내부 주요인물들이 김대중 정부나 당직으로 들어가 정치야합이라는 비난을 사며 명분을 잃었고 구심점도 약해져 적극적이고 효과적인 대항을 펴지 못했다.

특히 노무현 정권에서 정치와 교회는 국가보안법과 사립학교법에서 충돌한다. 노무현 정권이 추진한 4

대개혁입법 (국가보안법, 사립학교법, 과거사진상규명법, 언론개혁법) 중 국가보안법 폐지는 보수 기독교의 반공의식을 건드렸고 사립학교법은 기득권을 위협하는 시도였다.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반공의식을 약화시키는 것은 개신교 내부에서 보수진영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건 사회 속에서 보수 개신교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보수 개신교와 보수 언론이 함께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며 반 노무현 전선을 구축했고 조갑제 씨 등 우익인사가 한기총 집회에 출연, 기독교의 적은 좌파라고 선동하기 시작해 국보법 폐지를 저지하자 했다. 또 미군 장갑차에 두 여중생이 치어 숨진 사건으로 반미 분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반미는 미국의 한국 포기로 이어지고 남한의 공산화로 이어진다는 논리가 주장되며 <반공 - 친미 - 반 김대중, 반 노무현 - 우파단결>이라는 이념이 보수 기독교 진영을 지배했다.

사립학교 재정과 경영의 투명화를 강화하기 위해 개방형 이사제를 도입하고 재단 이사장 친인척들이 학교재단 등에 대거 취직해 장악하는 걸 제한하는 이 법제는 당시 중학 123개, 고교 165개를 소유하고 개신교가 바탕이 된 대학 30개를 갖고 있던 개신교 기득권에 상당한 손실을 가져 오는 건 당연했다. 사립학교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와 관련해서 목회자들의 삭발 십자가 행진 투쟁이 시작됐다. 2006년 12월엔 목사·장로 등 3천명이 영락교회에서 반대집회 후 성명 발표,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운동, 대선에서 보수진영 지원이 이어졌다.

그럼에도 사회 기류가 개혁과 쇄신으로 흐르면서 종교단체 기부금 내역 공개, 종교인 과세마저 사회적 쟁점이 되어 기독교 보수진영은 노무현 정권과 완전히 척을 지는 상황으로 굳어졌다. 노무현 정권 시대는 정권이 교회의 힘을 인정 않고 비판적 개혁의 칼을 들이대자 민주화 이후 과거의 특권이 줄어들고 변방이라 여겼던 진보 기독교인 인사들이 나뉘 득세하는 것에 부정적이던 보수 기독교인이 일치단결해 저항하고 사회세력과 결합한 정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자살 이후 추모분위기가 사회 전체로 번지며 개신교의 이미지와 신뢰가 망실되는데 영향을 끼친다.

이때 독특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대광고 강의석 사건이다. 학교의 강제적인 종교교육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사회 전체의 이슈로 떠오른다. 1인 시위와 학교에서의 제적, 단식투쟁, 인권위 진정, 퇴학처분 무효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진 이 사건은 “미션 스쿨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판례를 남겨 개신교의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개신교 보수 진영이 세를 규합해 가자 교단, 교회들은 한기총으로 몰렸고 반면에 NCCK는 재정과 동원력에서 힘이 줄기 시작했다. 더구나 한국이 OECD에 가입하면서 한국 교회를 지원하던 해외교회는

한국의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유로 원조를 줄이기 시작했고 NCC는 재정난을 겪기 시작했다. 결국 NCC는 진보진영 6개 교단으로 구성된 조직을 보수교단에 개방해 하나님의 성회(조용기), 정교회, 루터교를 받아들인다. 그 결과로 정체성은 열어지고 내부반목으로 하락세는 계속돼 최근 들어서도 존재감을 잃어가는 중이다.

반대로 한기총은 보수 대형교회를 구심점으로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에 불만 많던 보수성향의 목회자를 규합해 세를 확대한다. 이때 건강치 못한 교단과 목회자들, 심지어 이단시비가 있는 세력까지 끌어들이면서 이후 한기총이 몰락하는 이유가 됐고 한기총에 반발하는 한교연을 이끌어냈다. 지금에 이르러 한기총이 실제적인 주도권을 쥐되 다른 연합기구들을 모두 느슨하게 끌어안는 빅텐트 한기총의 움직임이 새로이 시작됐다. 결국 한국 교회가 쌓아온 민중지향적 선교전통과 대형교회의 기복적이고 자본화된 목회양태 ... 두 가지 중 보수진영의 흐름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한국 교회의 주류로 자리매김한다. 그 반증으로 교단장을 대형 교회 목회자들이 도맡기 시작했고 연합교회 기관장도 대형교회 목회자가 맡기 시작했다. 목회 현장에서도 목회후보생들은 대형교회 부목사를 비전으로 삼는 경향이 대세가 되었다. 진보정권을 거치며 보수진영이 주류로 들어선 것은 진보진영의 분열로 인한 결속력 약화, 경제위기 속에서 진행된 사회의 보수화, 시장주의의 발호가 배경이라 분석된다. 즉 정치권력과 교회의 관계에서 파생된 현상이기보다는 자본주의의 심화와 신자유주의의 대두로 사회 시스템의 시장화가 진행되면서 벌어진 일이라 하겠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 사회에는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가 깊이 뿌리 내렸고 개혁적인 성향의 정권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분배와 분산을 강조하게 됐으나 이것이 한국 교회의 기득권 수호와 충돌하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권과 개신교의 불화가 극대화되고 보수개신교 진영의 결속이 강해지자 이를 틈 타 기독교정당 운동도 등장한다. 특히 2004년부터는 정당투표제가 도입돼 소수정당이라 하더라도 유권자가 특정 정당에 일정 이상 표를 던지면 그것을 모아 국회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래서 군소정당이 증가하는데 기독교정당도 여기에 손가락을 얹으려 한 것. <한국기독교당>이 그 시작이었으며 정치경험이 있는 목사, 장로들이 주축이 되었다. 지역구 후보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전국구 후보는 기대했으나 지지율 1.1%에서 멈춰 기독교정당은 무산되었다. 그 이후로도 기독교정당 결성과 의회 진출은 계속되었으나 소기의 성과는 올리지 못하고 있다. 기독교정당에 집착하고 있는 인물들은 수구성향이 강한 우익인사들로 이 역시 개신교의 신망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은 전통적인 지지층인 보수 개신교 진영이 사회의 반공보수우익 세력과 결집하자 2007 대선에서 상당한 득을 보며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대통령 선거 역대 최다 531만 표 차. 이 배경에 개신

교의 이명박 장로 대통령 만들기 운동도 상당 부분 작용했다. 2006년 12월 한기총의 기독교 대통령 탄생시키기 공식선언이 등장했고 2007년 3월 김홍도 목사의 좌파 대통령 절대 차단 선동, 이명박 후보 출판기념회에 목회자들 참석, 세칭 ‘뺨쓰목사’ 전광훈 씨의 설교 중 지지 호소(선관위 경고), 한기총 대선정책협의회의 노무현 정부 비판과 이명박 지지 선언, 6월에 사립학교법 재개정 특별기도회, 7월 뉴라이트기독교연합 창립(김진홍 목사가 상임의장), 뉴라이트기독교연합의 대선 특별기도회 개최 등이다. 이명박 후보도 한기총 사무실을 방문하면서 호응해 개신교의 이명박 올인 현상은 대세가 되었다. 보수중도 성향의 미래포럼이 나서 지나친 선거개입을 우려할 정도였다. 전통적인 민주당 영역인 광주호남 지역조차도 호남 기독교인 중심의 기독교개혁운동이 조직되면서 이명박 지지도가 급상승해 호남에서 이명박 지지율이 20%에 이를 정도였다. 목사장로 여론조사에서 70% 정도가 이명박 지지, 박근혜 지지는 10% 미만일 정도. 손학규 전 경기지사도 나름 기독교운동권 진영의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 6~7% 정도에 그쳤다.

개신교 신도들의 정치성향은 조사마다 차이가 있어 가늠하기 어렵다. 보수가 70% 정도로 집계된 것도 있고 90%에 육박한다고 제시된 것도 있다. 개신교 인구의 7~80% 이상이 보수성향이라면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권자 그룹이다. 지역색과 당파색을 고려해 크리스천 유권자가 분산될 가능성은 크지만 개신교의 결속이 강하게 이뤄진 경우는 상당한 영향력을 갖는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개신교 인사들을 중용하면서 종교편향의 비난을 받는다. 장관 16명 가운데 개신교 10명, 청와대 수석비서관 8명 중 개신교 4명, 천제 청와대 비서관 41명 가운데 개신교 16명. 이는 고소영 정부라는 별칭에 잘 드러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서울시장 때부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보수 개신교 세력과의 밀착을 시도했다. 개신교 행사 공식 참석이 50회 (고건 감리교 권사는 시장 당시 12회, 이명박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간증정치’라고 불렀음). 서울을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서 소동이 벌어졌고 청계천 준공예배에도 목사가 초청되었다.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한 사진이 논란이 되었다. 문제는 불교 쪽의 반발로 종교 갈등이 불거졌는데 개신교도 정부의 전통문화 예산 70%가 불교계로 몰려 편향이라며 역차별을 주장 ... 이는 사찰이 많으니 당연하고 이명박 정부가 불교계 반발을 줄이기 위해 사찰 지원을 늘린 것도 작용했다.

이 같은 개신교의 이명박 대통령 밀어주기는 개신교의 정치적 야망에 불을 당기고 개신교는 스스로를 과신하기에 이르렀다. 이슬람 채권법(수쿠크법 저지), 동성애 규탄 등에 거침없는 배타성과 공격성이 발현되었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후반에는 조용기 목사가 정권퇴진 운동 발언까지 할 정도였다. 무상급식이 이슈화되자 오세훈 시장은 개신교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으나 실패하고 시장 직에서 물러났다.

문제는 이명박 정부가 촛불집회라는 시민 저항에 부딪힌 것. 이 때 개신교는 목사 9,000명이 촛불중단 호소문 발표하는 등 이명박 구하기에 나섰다. 이후 개신교의 이미지가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 촛불이라는 국민적 저항과 맞물리면서 개신교에 대한 혐오가 등장하고 사회적 트렌드가 되어 버렸다. 보수 기독교 진영은 정권과의 밀착을 배경으로 세를 얻고 교계의 주도권을 확실히 장악하지만 사람들이 교계로부터 떠나는 일명 가나안 성도 현상이 번지고 일반 사회에서 개신교 혐오가 번지면서 개신교계 자체가 위축되는 위기의 시작이었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도 개신교 일부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탄핵인용 반대에 나선 것 역시 개신교의 위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이 더 크리라 판단된다.

(3) 개신교 내부 구도의 변화

이런 정치적 과정과 별도로 한국 교회 내부에서는 세대교체가 집단적으로 진행되어 갔다. 강력한 지도력과 대중적 인지도로 교회와 교계를 장악했던 한경직 목사, 김창인 목사가 떠나고 그 뒤를 이어 김선도, 곽선희, 조용기 등의 초대형 교회 지도자들도 은퇴했다. 이후 후임 목사들은 그만큼의 강력한 카리스마를 갖지 못하거나 세습에 의한 명분 약화로 당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기류를 감지할 수 있다.

가장 주목할 것은 개신교의 보수우익화 경향과 교회 내부에서 신도들이 탈교회화 내지는 탈교권화의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또 가나안 성도 문제도 서서히 구조화되었다. 외부의 시민의식 역시 반기독교 풍조가 계속해 강해지고 있다. 언론이 교회의 대형화와 비리부패 등에 고발의 칼날을 들이댄 뒤 온라인과 SNS를 타고 기독교 혐오의 분위기가 번져갔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현상이다. 물론 여기에는 이단사이비 종파들의 교란도 첨가돼 있지만 눈여겨 볼 것은 내부고발과 가나안 성도 현상이 한국 개신교 내부에 이슈를 만들어내고 그 이슈를 사회이슈로 증폭시킨다는 점이다. (내부고발은 사랑의교회, 명성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등이 대표적 케이스)

또한 개신교의 구심점이 북한 출신 1세대에서 2세대로 바뀌면서 다소 얽어지는 듯 하지만 반공 분위기와 친미 성향은 북의 핵무장, 사드배치 등의 이슈를 타고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영향력으로 볼 때 각각의 개교회는 과거만큼 강할 수 없고 다만 한기총과 한교협 등 연합기구를 통해 개신교의 입장을 모아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한국 사회의 변동과 교회의 자본주의적 성장.

(1) 한국 교회의 내적 한계

1970년대 근대화 산업화와 함께 시작돼 1980년대와 1990년대로 이어진 도시화 과정은 인구의 대이동과 광역도시화를 가져왔고 교회도 이를 수용해 나름의 현대화를 거친다. 1970, 1980년대 고도성장기를 맞은 한국인의 욕구가 현세의 부와 성공을 외치는 자본주의 대형교회의 선교 방향과 맞아 떨어졌고 교회는 도시화, 중산층화, 대형화, 자본화의 길을 걸어갔다. 카리스마 넘치는 설교 위주의 교회예배가 정착되고 이후 케이블과 위성을 통한 텔레반절리즘이 출현했으며 교회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 스타일의 찬양과 경배 매뉴얼이 교회로 도입됐다. 교회의 자본적 대형화는 1988년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경제발전 속도에 맞춰 계속 진행됐다.

교회 성장 신학이 한국 기독교계를 지배하게 된 일면에는 미국의 풀러 신학교가 시작한 성공주의 선교학 이론도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되는데 상당수의 한국 목사들이 풀러 신학교 출신이다. 교회 성장을 목표로 해 사회과학과 행동과학을 통합한 성장이론은 목회자들의 유학과 미국 교민교회의 목회경험 등에 의해 계속 추진력을 얻고 있다. 그 구체적 현상들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차입 경영
- 고도성장 드라이브
- 독과점식 확장 - 주거지 이전과 관계없이 모교회 출석, 순환버스 운용, 주차장 별도 확보, 대여
- 제국적 해외선교
- 교회세습
- 과소비적 호사
- 순환출자식 사주 경영 - 대표 이사 후 회장, 지주회사 회장
- 외벽 십자가 자체 네온사인
- 분점 내지는 프랜차이즈형 확장
- 바이럴 홍보에 의한 목사 쇼핑 ... 평판이 입소문과 대중매체에 의해서 전파되고 인기 목사 찾아다녀.
- 목회자 1인에 대한 컬트적 숭배

한국 교회의 성장을 강하게 이끌어 온 것 중 하나는 20세기 이후 정립된 선민사상이다. 이스라엘 민

죽에 이어 한국 민족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선택 받았다는 것이고 그 증거가 한국 개신교의 엄청난 급속성장이라는 사상이다. 이는 자부심을 불러 일으켜 교회 성장의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문제는 그 자부심을 이끌어 온 대형 교회들이 윤리적으로 지탄받고 사회적 신망을 잃으면서 한국 교회의 상승세도 한계에 봉착하고 한국 교회의 내적 위기가 커졌다. 또 고도성장기에 변진 목사를 제사장으로 보는 신앙 양태 역시 한국 교회 대형화와 카리스마 목사교 성격의 토양이었으나 이것도 함께 붕괴되었다. 대형교회화는 한국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특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대형 교회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와 편익은 미국식 소비중심 자본주의 경향과 맞아 떨어지는 것으로 효율성 위주의 획일적인 선교로 지역특성과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이는 미국식 자본주의화 교회가 한국으로 전파돼 한국식 자본주의화 교회가 되는 과정이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한국화가 세습, 버스 동원한 독과점, 전국 프랜차이즈화 등이라 하겠다.

미국식 경영학이 한국 교회로 유입되면서 마케팅과 회계가 강조된 것도 특징이다. 교인 관리 시스템과 전도 매뉴얼, 부동산 투자, 금융기관 차입 경영 등 곳곳에서 이런 특질을 찾아볼 수 있고 개신교 교회간의 교인 수평 이동이라는 고질현상도 자본주의화 된 종교소비의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시장 친화적 목회로 대형교회의 교파성이 약해지고 개교회의 편익성에 치중하면서 교단과 연합기구가 위축되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구나 이런 특질은 대형교회에서 중형교회로 전파되어 한국 교회의 주류현상으로 자리잡아갔다.

이러한 보수 및 친미, 시장주의라는 독특한 한국 개신교의 특성은 신학대학을 통해 확대 재생산된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전국신학대협의회 소속 신학대 교수 가운데 64.5%가 미국 유학파이고 독일이 13.4%, 영국 3.1%, 프랑스 1.6%, 스위스 1.4% 또한 대형교회의 2세대 목회자들도 미국 교민교회 목회 경험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어 이 또한 보수개신교의 특질이 그대로 이어지는 데 일조하고 있다.

1990년 대 들어 가톨릭 교세가 커지고 개신교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다. 가톨릭 신자의 18.8%가 타종파에서 건너온 신자로 분류되는데 그 가운데 62.2%는 개신교 신자로 추정된다. 권위주의 시대의 음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정서적이고 표피성 강한 위안을 주던 성공주의 신화 중심의 개신교와 진중함과 무게를 내보인 천주교와의 이미지 차별화에 따른 이동일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젊은 층이 개신교보다 가톨릭에 호감을 보이는 것은 1970년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천주교가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역할을 맡은 것에서 비롯되는 바도 크다. 1987년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바로는 개신교의 몫이 크다고 할 것이나 막판 천주교정의구현 사제단의 활동과 명동성당의 역할이 민주화 운동의 후광으로 인식되어 개신교의 민주화 운동은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또 한국 개신교의 YS DJ 편 가름과 보수 교회의

관변 성장이 신도들을 놓치는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조용기, 김선도, 김홍도, 김창인 등 70~80년대를 이끈 개신교 지도자들의 치부가 드러나면서 실망감 커진 것도 원인이다. 거기에 얹어 명분 없는 과감한 세습화의 추진도 사회의 반발과 반감을 사면서 개신교 교세 감소의 원인이다.

(2) 한국 교회를 둘러싼 상황적 한계

1990년대 민주화 이후 사회변동과 관련된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구조와 흐름, 두 가지 차원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교회가 고도성장을 하던 시기인 1980 ~ 1990에 한국의 베이비부머 1세대가 십일조 연령층으로 교회에 대거 진입했고 이어서 베이비부머 2세대의 전위도 진입해 한국 개신교회는 성인 신도 규모와 십일조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그 아래쪽에서는 이후를 이을 청년, 대학, 중고등부가 줄기 시작하는 인구적 변화가 시작되었고 한국 교회 침체의 가장 커다란 구조적 요인이 되었다.

그 다음은 교회 역시 사회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 하위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사회의 흐름을 놓친 것을 문제로 지적할 수 있다. 1997 외환위기, 2008 세계 금융위기를 건너면서 무엇이 문제이고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지 실천도 미약하고 정체성도 희미했고 설득력 있는 선언도 등장하지 못했다. 한국 사회가 맞닥뜨린 것은 자본주의의 한계이자 신자유주의에 따른 구조적 결함이고 혼란인데 기성정치는 컨트롤 능력을 상실하고 교회도 예언자적 사명을 놓쳤다. 닥쳐 올 건 빈곤과 생존경쟁인데 교회는 그 속도와 강도를 알아차리지도 설명하지도 대책을 만들지도 못했다. 냉정히 말해 그리하고자 하는 노력도 상당히 미흡했다. 이것은 모든 종교가 공히 감당할 비난이지만 불교나 가톨릭과 달리 민중의 삶 속에 가장 밀착해 있는 개신교로서는 뼈아픈 반성이 필요한 지점이다.

이제 인구적으로나 사회구조의 변동으로나 개신교 인구의 코호트(모집단)가 늘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회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회선교와 이미지 개선을 추진하고 이에 의존해 선교가 이뤄져야만 한다. 특히 사회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현실적 불평등이 깊어지면 제도 종교가 더 기복적이 되거나 사이비 이단 종교와 공존 시스템으로 갈 공산이 크다. 따라서 한국 개신교는 기복적 신앙을 고집하는 수구적 목회스타일과 이단사이비성 유사교회로 부터의 공격에 의해 개혁과 쇄신을 이뤄내지 못할 공산이 크다. 또한 시민사회의 지적수준이 높아짐에도 이를 반영치 못해 지식인 그룹이 교회를 떠나고 한국 교회는 지적수준이 낮아지는 하향평준화로 갈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3) 2010년 이후의 한국 교회 - 인구센서스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 시대 불평등이 커지고 빈곤화가 진행되면서 농촌 및 소도시 인구가 다시 대도시로 몰리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이 상황에서 개신교회는 도시에 수적으로 압도적인 세력을 포진시키고 있어 재 도시화로 인해 도시로 몰린 인구를 흡수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마다 배출되는 상당한 규모의 신 학대 졸업자들이 전국으로 분포되며 교회를 개척하는 것 역시 전체 개신교 신도 규모를 지탱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도시로 이주한 인구의 특성 상 인적 네트워크를 빠른 시일 안에 확보하려면 교회 등록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어서 교회로의 흡수도 용이하다 볼 수 있다. 무종교인 인구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 부산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해석된다.

우리 근대사를 살펴보면 개신교는 국가주의에 영합하거나 결합될 때 강력한 정치성을 발휘했다. 또 교회는 정치적으로 국가주의와 윈윈하는 토양에서 성장을 구가했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는 보수정권 10년 동안 분단 냉전 이데올로기의 부활, 한반도 정세의 불안, 반공 이념의 강화 등도 개신교의 교세를 유지한 배경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례로 박정희 정권 시절의 개신교 증가세를 살펴보면 (한국종교사회연구소 통계)

1960년	5,011개	개신교인	60만
➔ 1970년	12,866개		300만
➔ 1980년	21,243개		700만

이 같은 한국 개신교회 성장이 2005년 이후 2015년 사이에 반복되었다는 가설은 한국 개신교 인구에서 보수층이 상당히 많아야 한다는 걸 배경으로 깔고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된 2004년 한신대 학술원 신학연구소(전국 20세 이상 개신교인 2,000 명 표본조사)를 보면

귀하는 스스로를 보수적이라 생각하는가 진보적이라 생각하는가?
- 약간 보수적 60.5%, 매우 보수적 10.3%

목회와 신학 2007년 1월호 조사 (목회자 500 명 표본)

한나라당 37.8% / 열린우리당 11.8% / 민주당 5.6% / 민주노동당 5% / 국민중심당 0.6%.

(4) 21세기 한국 교회의 과제

한국 교회의 위기는 <한국 경제 vs 일본 경제>의 구조 비교에서 들여다 볼 수도 있다. 일본의 성장 지체는 일본인들이 저축을 해놓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를 억제하며 침체기를 맞게 된 것이고 한국은 빚 얻어 쓰다가 힘에 부쳐 소비를 줄이는 비중이 크다. 한국 교회 역시 지금의 십일조 등 수입은 가계부채 속에서 짜내고 있는 것이고 금융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어 미리 축소 균형을 미리 해 두지 않으면 위기는 커진다. 교회가 소유한 부동산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처분하고나 가용성을 높여 지역사회와의 공유 등을 통해 부가가치와 부동산 보유 명분을 높여야 한다.

또한 일본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의 틀이 마련되고 정부의 컨트롤이 먹히는 수준을 유지했다면 한국 경제는 컨트롤 타워와 대기업의 부실, 비리가 정상수준을 넘어서버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 교회 역시 도농, 대형과 중소교회의 상생의 틀 없이 교단 및 연합기구 컨트롤이 전혀 듣지 않는 상황이어서 위기를 빠져나가기 이전에 도미노 현상을 불러 올 공산이 크다.

현재 사회는 지극히 시장중심의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인간관계조차도 교환가치 중심이다. 그러나 물질적 교환가치에 치중한 인간관계는 상호연대와 존중의 공동체가 아닌 시장만을 형성한다. 복음 중심이 자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성을 키워 나가는 게 교회의 성장전략에서 시급하다는 것이 일반적 지적이다. 이것을 교인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시장이 정상적 관계가 아니라 비시장적 관계가 정상이며 현대 사회의 세속적 세태와는 달리 교회만이 비시장적, 비경쟁적 삶을 구축해 가고 있다는 것을 사회에 보여줘야 하고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한다. 특히 예외적으로 성장하거나 성공한 사례를 모델이나 성공신화로 만들어 전파하는 새마을 운동식의 선교 이념도 털어내야 한다. 썩어가는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는 삶의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21세기 경쟁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특히 2015년 이후의 한국 사회는 흡수저 논쟁에서 보듯이 계급적 인식이 강하게 번지고 있다. 빈부격차를 따지는 것에서 빈부의 계급성을 바라보게 된 것이다. 이는 2017년 대선국면에서 정치의식과 결합돼 우리 사회의 강한 트렌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계급성은 갑을, 정규직비정규직, 양성차별 등 사회 각 부문에서 번지다 교회 안으로 계급적 논쟁이 들이닥칠 경우 교회는 목사 vs 비목사, 교권파 vs 비교권파 식의 분열과 분규의 폭풍을 맞이할 수 있다. 계급적 다툼을 피하는 대신 교회를 떠나는 가나안 성도 현상이 강해 질 수도 있다.

(5) 교회를 향한 제언

교회와 신학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삶을 복음적 가치로 이끌려면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현실 속 모순과 억압, 한계에 대응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신학, 문학, 목회, 경영 어느 것이든 정치를 배제한 채로 이룰 수 없기 때문이다. 신앙은 가치판단으로부터 초탈하거나 정치적 문제의 외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사회에 공존하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의견, 가치들이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고 조정되면서 모두의 바람직한 미래를 그려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를 지향하고 사회의 구조를 선하게 바꾸는 지점에서 정치를 만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회는 목적에서는 이상주의적이어야 하고 수단에서는 현실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현실 속 정치권력과 멀고도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복음에 비추어 국가가 어떠한가 하고 권력자가 어떠한가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는 교회라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고 복음을 떠나 국가와 권력에 유착한다면 그 또한 불의하다 할 것이다.

한국 정치사를 교회와 연관 지어 들여다 볼 때 문제는 교회가 정치를 어디에서 만나느냐로 귀결된다. 이는 교회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라는 신앙고백과 닮아 있다. 사람들을 교회로 불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장담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에게로 나아가 그들을 품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실천적 고백을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한국 교회는 정치를 주로 밀실에서 만나왔다. 교회의 최고위층이 권력의 수뇌부를 만나고 얻어내고 움직이는 걸 정치로 여겨 온 것이다. 그것은 복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옳바르지 못한 정략적 행위이다. 교회의 정치참여는 정당과 정파에 얽힌 정치행위가 아니라 사회의 모순과 고통을 해결하는 예언자적 사명으로 감당해야 한다. 그렇기에 정치는 교회가 진실과 정의, 민중을 위해 나서는 고매한 소명이다. 이를 소수의 교회와 교권을 위한 자산으로 불러가고 이용하는 것은 교회적으로는 타락이고 정치적으로는 불의인 것이다. 정치행위를 이용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위험의 소지가 크고 결국 역풍으로 돌아옴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정교분리와 정치참여의 양 날개로 시대를 헤쳐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시대에 요구되는 복음적 가치와 신앙적 결단을 찾아내고 이를 주제로 성도와 사회에 갈 길을 제시해야 한다. 교회는 정파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의 정치적 입장과 정책이 복음적이기에 지지함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드러냄이 정치적으로 교회가 설 옳바른 지점이다. 조직과 권력으로서의 교회는 현실정치 및 정치권력과 분리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다. 다만 사회정의를 외치는 목소리, 위정자의 교만과 월권을 꾸짖는 외침, 낮고 추운 곳을 향한 자비, 평화를 향한 갈구에

있어서 교회는 정치와 분리될 수 없고 분리되어서도 안 되며 교회의 고매한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바로 세워가야 할 것이다. 

최근 혐오·증오·편견에 기반한 가짜허위조작정보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사회적 대책에 대해

: 범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대처 방안을 중심으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상지대 초빙교수)

1. 종교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1) “울지마 톤즈” 다큐멘터리를 볼 때마다 회개하고, 성찰하게 됩니다.

- 고 이태석 신부님, 관련 다큐에서 남수단 불모의 땅 톤즈에서, 교회를 먼저 세울까 하다가, 이곳에 제일 필요한 것은 병원이고, 학교라고 생각되어 병원부터 짓고 진료부터 하기 시작했다는 그 말씀이 어찌나 큰 울림이 되었던지요.
- 고 이태석 신부님의 숭고한 삶이 남수단 교과서에 실린다고 합니다.

"당신은 영웅"...남수단 교과서 실린 故 이태석 신부²⁹⁾

[앵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헌신적인 삶을 살다 선종한 '울지마 톤즈'의 주인공 이태석 신부의 삶이 내년부터 남수단 학생들에게 소개됩니다.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교과서에 소개되는 일은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카이로에서 노재현 특파원이 전합니다.

[기자] 의사를 포기하고 신부가 되어 아프리카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외면받는 곳, 남수단 톤즈로 향한 이태석 신부. 그곳에서 그는 의사이자, 친구, 때로는 아버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2001년 톤즈에 정착해 2010년 암으로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의 헌신적인 삶을 조명한 내용이 내년 2월부터 남수단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학생들에게 소개됩니다. 2015년 남수단 교육부가 이 신부를 교과서에 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한지 4년 만입니다.

교과서에는 이태석 신부의 학창시절부터 남수단에 오게 된 과정, 사진 등이 구체적으로 실렸는데요. 고등학교 교과서는 특히 이 신부가 남수단 국민은 물론 전 세계에 영웅으로 남아있다고 적었습니다.

다. 현지 매체는 남수단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외국인이 교과서에 소개되기는 이 신부가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베푼 사랑을 남수단 정부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톤즈의 유일한 의사로 현지에서 '졸리'라는 친근한 애칭으로도 불렸던 고 이태석 신부. 그의 삶은 '올지마 톤즈' 영화를 통해서도 국내에 널리 알려져 많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2) 척박한 분단과 여전한 대결의 땅에서, 심각한 양극화·불평등·민생고의 땅에서 “평화의 기도”를 올려 봅니다.

평화의 기도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위로 받기보다는 위로 하고,

이해받기 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 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29) 기사 원문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118004900038/?did=1825m>

3) 개신교내 일부 목회자들과 세력들이 보여주는 극우·극단적 입장과 공격적·수구적인 태도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 많은 국민들이 이를 우려하고 있고, 나아가 학생·청소년, 청년·대학생들 사이에서는 개신교 전체에 대한 관심과 인기를 더욱 떨어뜨리고 기독교와 종교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종종 강력한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우리 세상과 사회의 빛과 소금이라는 종교의 본령에도, 세상과 실존에 대한 구원이라는 종교의 역할과도,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선교와 교인의 확대라는 목표와도 너무나 동떨어진 극단적·공격적 개신교 일부 집단의 행태에 대한 범사회적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4) 프란치스코 교황을 떠올려봅시다. 그 분만 생각해도 웃음과 평화의 기운이 피어오릅니다.

[지평선] 아시시 넘는 ‘평양의 프란치스코’³⁰⁾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로 시작하는 ‘평화의 기도’는 아시시의 프란치스코 성인(1182~1226)이 젊은 시절 나병환자 모습으로 비천한 자신을 찾아온 주님을 몰라보고 불친절하게 대접했던 잘못을 회개하며 평화의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바친 것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로 이어지는 이 기도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한번쯤 보고 들으며 낭송해봤을 만큼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가장 유명한 기도이기도 하다.

□ 2013년 건강을 이유로 돌연 사임한 베네딕토 16세를 이어 제 266대 로마가톨릭교회 수장으로 선출된 프란치스코 교황은 콘클라베 투표 결과가 나온 직후 옆자리 추기경이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순간 프란치스코란 이름을 떠올렸다고 했다. 한때 기사도에 꽃혔던 성인 프란치스코는 중세의 종교간 대화에 앞장선 평화의 일꾼이기도 했다. 교황 역시 이름에 걸맞게 가난한 사람뿐 아니라 중동과 콜롬비아 등 분쟁과 갈등을 겪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 수교에도 그의 손길이 닿았다.

□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첫 비유럽(아르헨티나)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도 깊은 관심을 보여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이틀뒤 “남북 지도자들의 용기있는 결단을 지지한다”고 했고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전에도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로운 미래를 보장하기 바란다”고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에게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은 교황을 만나보라”고 권하고 “교황이 방북하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답을 끌어낸 배경일 것이다.

□ 17일 저녁(현지시간) 바티칸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가 열렸다. 교황청이 문 대통령의 이탈리아 공식방문에 맞춰 특별히 마련한 미사다.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이 집전한 미사 참석 후 문 대통령은 기념연설을 통해 “교황 성하께서 평화를 위한 우리의 여정을 축복하고 기도로써 동행해 줬다”며 “우리 겨레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신 교황에게 거듭 깊이 감사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교황을 만나 김 위원장의 방북초청 의사를 전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가 평양의 프란치스코로 환생하는 기적을 볼 수 있을까. 이유식 논설고문 jtino57@hankookilbo.com

[아침햇발] '평화의 사도' 프란치스코³¹⁾

유럽을 순방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로마 교황청에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난다. 대통령의 교황 면담은 과거에도 주목도 높은 뉴스거리였지만, 이번 만남에 쏠리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교황 방북’을 제안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고 흔쾌히 초청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교황 방북이 성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그동안 보여준 행보로 볼 때도 그렇거니와, 교황의 이름에 담긴 뜻으로 보아도 기대를 품어봄직하다.

2013년 3월13일 아르헨티나의 호르헤 베르골리오 추기경이 전 세계 가톨릭교회의 수장으로 선출된 직후 교황청은 새 교황의 이름을 ‘프란치스코’라고 발표했다. 전임 교황 가운데 아무도 쓴 적이 없는 ‘낮선’ 이름을 듣고 가톨릭 세계는 어리둥절했다. 사흘 뒤 새 교황은 자신의 이름이 ‘아시시의 프란치스코’에게서 따온 것이라고 밝혔다. 프란치스코 성인(1182~1226)은 ‘가난한 이들의 빛’으로 알려져 있다. 부호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날을 방탕하게 보내던 프란치스코는 몇 차례 삶의 위기를 겪은 뒤 통회하고 새사람으로 태어났다. 가진 것을 모두 포기하고 나병환자 같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들 속으로 들어갔다. 베르골리오 추기경은 콘클라베 투표에서 새 교황으로 결정된 순간, 옆 자리의 추기경이 ‘가난한 이들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한 말을 듣고 곧바로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떠올렸다고 한다.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따라붙는 또다른 이름은 ‘평화의 사도’다. 젊은 날 ‘명예와 무용의 중세 기사도’에 빠졌던 프란치스코는 화려한 무구를 갖추고 전쟁에 나갔다가 붙잡혀 1년 동안 포로 생활을

30) 기사 원문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0181555093768?did=NA&dtype=&dtypecode=>

31)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66027.html>

했다. 그리고도 기사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다시 전쟁터로 향하던 중 하늘의 음성을 듣고 무구를 버렸다. 평화의 일꾼으로 거듭난 프란치스코는 이집트로 가서 십자군전쟁 중단을 호소했고 그곳에서 술탄을 직접 만나 종교 간 대화를 시도했다. 그 이력을 기억하고 있었을 새 교황은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나는 지난 세월 일어난 많은 전쟁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그 누구보다 앞장서 평화를 말한 분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라는 이름이 가리키는 대로 새 교황은 즉위 이후 분란과 갈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갔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지역을 방문했고, 콜롬비아 내전의 종식을 중재했으며, 미국과 쿠바의 역사적인 수교를 지원했다.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에도 끊이지 않고 관심을 보였다. 프란치스코의 평화 정신을 이어받은 교황이 한반도 평화에 이바지할 기회를 뿌리칠 이유가 없어 보인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바티칸 집무실 벽에는 성화 <매듭을 푸는 성모 마리아>가 걸려 있다. 1986년 독일 유학 중이던 베르골리오스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이 성화를 보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한다. 뒷날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이 성화가 새겨진 잔을 선물하기도 했다. 갈등·분열·증오의 매듭을 푸는 신의 일꾼이 되어달라는 뜻이었으리라.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황청이 주재하는 한반도 평화 기원 미사에 참석한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가톨릭 미사 때마다 올려 퍼지는 ‘평화의 기도’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시의 성자가 걸은 길을 따라 한반도의 화해와 일치를 앞당기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기도해 마지않는다.

5) 극우 개신교 막말 대잔치 기사를 보았습니다. 막말뿐만 아니라 허위·조작의 말까지 대잔치입니다.

-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상징인 종교인들이 나서서 오히려 혐오와 증오, 편견과 불신을 부추기고 퍼트리고 있는 꼴입니다. 아주 반사회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아래 <뉴스앤조이>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증오에 기반한 반사회적·원색적 비난이 난무하고, 전라도에 대한 지역차별적 발언, 혐오를 부추기는 발언이 나오고, 또 반미와 고려연방제를 추진한다는 전형적인 가짜 뉴스가 또 나옵니다. 성적 정체성에 대한 공격과 가짜 뉴스도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인이라가 보다는 철저한 극우·극단적 이념 집단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또, 많은 종교인들이 사형제 폐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에도 공개적인 집회에서 사형이라는 억지주장을 펼치는 모습도 참으로 의아하기만 합니다.

극우 개신교 막말 대잔치 "문재인 사형시켜야"³²⁾

전광훈·변승우·김철홍 "문재인은 깡패, 박근혜 석방"

"여러분, 문재인이 민족 반역자인가 아닌가. 반역자는 단지 탄핵만 시켜야 하는가. 아니면 사형도 시켜야 하는가. 사형시켜야 한다. 반역자는 죽어야 된다. 역사를 보면 반역자는 사형시켰다. 극형에 처해 나라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총궐기' 설교자로 나선 변승우 목사(사랑하는교회)가 울분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목사 입에서 "사형시켜야 한다", "죽여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참가자 수천 명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극우 기독교와 태극기 부대가 손잡고 개최한 '문재인 대통령 퇴진 총궐기'가 11월 17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렸다. 이번 집회는 전광훈 목사(사랑제일교회)가 주도했다. 1부 행사 사회를 본 전 목사는 "잘나가는 대한민국을 문재인 강도가 나타나서 나라를 침몰시키고, 고려 연방제로 가려고 하는데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을 저지하기 위해 모였다"고 말했다.

총궐기 1부는 기도회로 진행됐다. 변승우 목사가 강단에 서자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다.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변 목사는 설교 시작과 동시에 북한을 비난했다.

"북한은 세계 최악의 기독교 박해 국가이다. 기독교인을 고문·강간하고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는다. 그런데 어떻게 지지할 수 있겠는가. (중략) 특히 호남 지역 목사와 기독교인들에게 묻고 싶다. 왜 이게 여러분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자들을 지지할 수 있는가. 전라도는 속히 회개할지이다."

문재인 정부를 '반역 정권'에 빗대며 강하게 비난했다. 변 목사는 "김정은은 바뀐 게 없는데 대한민국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했다. 평화 시대가 왔으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한미 동맹을 빈껍데기로 전락시키고, 국민을 핵 인질로 잡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에게 이적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탄핵하고, 나아가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다. 난데없이 동성애 이야기도 나왔다.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 회개해야 할 죄악이라고 했다. 변 목사는 "동성 행위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 동성애자들이 아무리 관계해도 자녀는 생기지 않고, 풍만 나온다. 어떻게 동성애가 정상인가. 동성애자들이 입양한다고 해서 모성애와 부성애는 생기지 않는다"고 했다. 설교 말미 변 목사는 참가자들에게 "박근혜가 탄핵감이면 문재인은 사형감이다"라는 말을 따라하라고 했다. 참가자들은 일제히 "박근혜가 탄핵감이면 문재인은 사형감이다"고 외쳤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장로회신학대학교 김철홍 교수(신약학)도 발언자로 나섰다. 김 교수는 중국 시진핑 주석을 깡패 두목, 김정은 위원장을 행동 대장, 문재인 대통령을 행동 대원으로 지칭하며 합쳐서 '깡패 집단'이라고 비하했다. 김 교수는 "떨어진 행동 대원 문재인과 깡패 집단은 대한민국을 반일·반미·친중, 고려 연방제로 만들려고 한다. 이들의 계획은 이뤄질 수 없다. 미국 트럼프 정부가 이들을 무너뜨리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깡패 두목이 제일 먼저, 행동 대장 김정은이 차례로 무너질 것이다. 깡패 집단 줄게 문재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 민주 세력이 책임지고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발언 말미에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박근혜 대통령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고 외쳤다...(하략)

6) 오죽하면 민주당에서 고발까지 하고 나섰을까요?

- 아래 뉴스앤조이 기사에 나와 있는 한 개신교인들의 밴드를 보면, 온통 거짓말 뉴스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 연방제로 조작하고, 토지의 공공성을 지금보다 확대하려는 것을 토지소유권을 박탈하고, 재산을 균등 분배하는 공산주의 체제라고 또 거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 5.18과 세월호 참사가 언급되는 것이 당연함에도 5.18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혐오, 비방의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또 사실을 확인하면 문재인 정부 개헌안 어디에도 세월호 참사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물론, 5.18광주민중항쟁과 87년 6월 항쟁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고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 선거연령도 정확하게 만 18세로 인하한다고 되어 있는데, 17세까지 하향한다고 해놓고, 역시 청소년 참정권 확대에 대한 반대와 편견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문재인 정부 헌법 개정안 중 전문(前文) 개정안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32) 기사 원문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1028>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민주당 "일부 교회 중심으로 가짜 뉴스 유포"³³⁾

24명 고소 "교회서 무슨 이유로 허위 사실 강연하는지 걱정"

[뉴스앤조이-최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교회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되고 있다며, 교회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는 3월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 가짜 뉴스 유포자 24명을 추가 고소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제기한 고소는 449건에 달한다.

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회 댓글조작·가짜뉴스법률대책단 조용익 단장은 "이번 주 역시 일부 교회를 중심으로 가짜 뉴스가 유포되는 경향이 있다. 교회에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러한 허위 사실을 강연하는지 걱정이 많다. 더 이상 교회라는 장소를 이용해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강연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단장은 "한 번만 집중해서 읽어 보면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이를 무분별하게 유포하는 행위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지시해서 움직이는 거 아닌가 의심을 갖게 한다"며 경찰이 가짜 뉴스의 근원지와 조직적 유포자를 찾는 데 주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가짜 뉴스는 대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해 적화 통일을 시도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는, 2월 말 미아동 한 교회에서 문재인 정부가 고려 연방제를 도입하려 하고, 양성평등 용어를 성평등으로 바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도 서대문구 한 교회에서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인권을 생각한 적 있느냐"면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옹호했다.

33) 기사 원문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6304>

2. 일부 극우·극단적 개신교 세력의 가짜·허위·조작 정보 생산과 유통은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1)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일부 극우·극단 개신교 세력의 가짜·허위·조작 정보 생산과 유통을 보면, 그 내용이 전혀 팩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 상정한, “섬멸해야할 적”들에 대한 음해·혐오·증오의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어찌 빛과 소금이라는 종교인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최근, 국민연금과 쌀 관련 가짜 뉴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고, 탈핵이나 대안에너지 태양광 발전에 대한 가짜뉴스도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상곤 전 교육부총리는 ‘숙명여고 한 교사의 탈선’관련 엄청난 가짜뉴스의 큰 피해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이런 가짜뉴스들의 상당수도 종교인이나 교회를 통해서도 유포되고 있을 것입니다. 음해·혐오·증오에 기반한 가짜·허위·조작 정보의 생산과 유통을 멀리하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야할 종교의 역할과는 정 반대의 범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지금도 유튜브 등 SNS에서 버젓이 떠돌아다니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들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뉴스들을 보면, 국민연금, 쌀, 최저임금 등과 같이 중요한 민생경제적 이슈를 거짓으로 왜곡하는 기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은 올바른 민생경제 정책 및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 큰 장애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손해와 고통을 겪게 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4) 예를 들면, 국민연금은 어떠한 사적 연금보다 우리 국민들의 노후 복지에 기여하고 있고, 실제로 가장 수익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행태로 만약에 국민연금 정책이 약화되거나 후퇴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사회 어르신세대들, 넓게는 전 국민이 입게 되는 것입니다. 쌀값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농민단체들은 쌀값이 너무 작다며, 쌀값 인상을 격렬하게 요구하고 있고, 이에 따라 예전에 폭락했던 쌀값이 일부 오른 측면이 있는데 마치 북한에 쌀을 퍼주어 쌀값이 폭등했다는 식의 거짓 뉴스를 퍼트리게 되면, 농민들을 위한 쌀값 정책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고 남북관계 개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합니다. 반드시 올라야할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왜곡과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일부 개신교인들도 이와 같은 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면)종교인들이 앞장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돕지는 못할망정 그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짓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5.18 피해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 우리 사회에서 가장 슬픔에 젖어 있는 분들에 대

한 가짜뉴스, 혐오·증오 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5.18 광주학살의 피해자들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혐오하고 조롱하는 가짜 뉴스들이 유튜브, 특정 사이트 등에 범람하고 있는데, 이 얼마나 참혹한 일입니까. 피해자들과 유가족들을 두 번, 세 번 죽이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참조 : 북한에 대한 혐오·증오·편견, 남북관계 개선을 파탄 내려는 정치적 음모에 기반한 쌀값 관련 가짜 뉴스가 얼마나 허구인가 알 수 있는 뉴스들

쌀값의 착시 현상³⁴⁾

필자는 요즘 쌀값에 착시 현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의아해할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착시보다는 착각이라고 해야 옳을 듯한데 80kg 쌀값에 대해 얘기를 하고 싶다. 통상 통계상에서 쌀값에 대해 얘기할 때 흔히 80kg(정곡) 쌀에 대한 가격을 말하고 있다. 실생활에서 접하기 어려운 이 80kg 기준으로 쌀 가격을 제시하다 보니 소비자들이 쌀값의 수준을 착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최근 11월 5일자 산지 쌀값이 발표되었는데 80kg 기준 19만3,696원으로 농민들은 곧 쌀값 20만원 시대가 올 수 있겠다 라는 기대감마저 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 가격은 시중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현재 시중에는 대부분 4kg, 10kg, 20kg 단위로 유통되는데 시장에서 유통되지도 않는 80kg 기준 쌀 가격으로 인하여 마치 쌀값이 엄청 비싼 것처럼 보이는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즉 쌀값의 착시 현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필자가 본지 10월 15일에 “쌀값의 오해와 진실”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바 있다. 요점은 현재 쌀값은 일부 언론에서 말하는 “폭등”이 아닌 2016년산 쌀값 대폭락 이후 회복한 상황이며, 밥 한 공기 쌀값은 전북 소비자가격 기준 300원 수준으로 다른 공산품 및 대체재와 비교해서 높지 않다는 내용이다. 그럼, 왜 이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쌀값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분들도 계실 것이다. 현재의 쌀값은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정부나 국회에서는 앞으로 5년간 변동직불금의 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정곡 80kg 기준 18만8천원) 재설정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매 5년마다 정부(안)을 토대로 국회가 심의·결정해서 확정한다. 현재 목표가격은 2017년도까지 기준으로써 2018년 ~ 2022년까지의 목표가격은 올해 새롭게 재설정해야 한다. 농민단체 및 정부, 국회 등에서 민감하게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더 들어가 보면, 지난주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목표가격 변경동의 요청서”를 기존 산정방식에 의거 산출된 18만8,192원으로 국회에 제출 후 11월 8일 당정 협의를 진행했으며, 당정은 물가상승

를 반영하여 19만 6천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농민단체들은 최소한 밥 한 공기에 300원 수준인 24만5천원을 요구하고 있으며 농협에서도 물가상승률 및 쌀 농업소득 감소율 등을 고려한 20만원 이상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22만원 3천원 ~ 24만원5천원 수준을 주장하고 있어 5년전 목표가격 결정할 때에도 7개월 동안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국회 동의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예상된다.

다시 쌀값의 착시 현상에 대해 얘기해 보면 쌀 목표가격 재설정을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법률 개정할 때 목표가격 설정 단위를 현재 시장에서 주로 유통되고 있는 10kg(11월 5일 산지 쌀값 기준 24,212원)이나 더 나아가서는 1kg 수준으로 변경해서 시장에서 쌀값이 높다는 불필요한 오해 요인을 제거하여 소비자들이 정확한 쌀값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올해 정부는 쌀 직불제도 개편 논의 - 논·밭 직불금 단일화, 쌀 수급 불균형 해소, 중소규모 농업인 배려, 농업·농촌 공익 증진 등 - 도 진행하고 있는데 모쪼록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유재도<전북농협 본부장>

쌀값은 비싸다? 쌀값 인상은 북한 원조 때문?³⁵⁾

쌀값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18만5280원. 이달 초 쌀 한 가미(80kg) 가격이다. 지난해 수확기 쌀 가격 15만4603원과 비교하면 1.2배가량 올랐다. 쌀 생산량은 매년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데 왜 쌀 가격이 올해 들어 급격히 올랐을까. 일부에서는 해외원조와 대북 쌀 지원이 쌀값 인상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단체들은 쌀값 인상은 폭등이 아니라 정상화라며 물가인상률을 반영해 24만원 수준이 적정 가격이라고 주장한다.

◆“쌀값 인상은 북한 원조 때문이다”→전혀 사실 아님

쌀값이 가파르게 인상하자 온라인상에서는 정부에서 북한에 쌀을 원조하는 바람에 비축 물량이 떨어진 것이 원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일부 보수성향 1인 방송에서는 정부가 구체적으로 쌀을 원조한 정황과 선적 루트를 보여주는 영상을 제작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이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대규모 대북 지원과 북한의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 폐기를 연계하는 정책을 펴면서 식량 지원을 중단했다. 1995년부터 2007년까지 국내산 쌀과 외국산 쌀 265만t을 북한에 차

34) 기사 원문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19171>

35) 기사 원문 <http://www.segye.com/newsView/20181014000745>

관방식이나 무상으로 지원했지만 2008년 이후 대북 쌀 지원은 더는 이뤄지지 않았다. 쌀값 인상은 정부의 강력한 수급 관리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공공비축미 35만t과 시장격리 37만t을 합해 총 전체 쌀 생산량(397만2000t) 중 18%(72만t)의 쌀을 매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16년 산 수확기 쌀값이 12만9711원으로 20년 전보다 더 낮아지면서 쌀 직불금 규모가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시장격리(수매해 창고에 저장하는 것) 물량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다. 정부는 올해도 35만t을 추가로 매입했다. 덕분에 쌀값은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해서 오름세를 기록 중이다.

◆“쌀값 폭등은 사실 아니야”→절반의 사실

가파른 쌀값 인상으로 ‘쌀값 폭등’이라는 언론 보도가 이어졌지만 농민 단체들은 ‘쌀값 정상화’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이달 초 쌀 값(18만5280원)은 2016년산 수확기 쌀값보다 1.4배 올랐지만 17만원 중반대를 기록한 2012~2013년산 수확기 쌀값과는 1만원가량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새로 수확하는 쌀 공급량이 늘어나면 가격은 17만원 후반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급락한 쌀값이 정부의 수급정책의 영향으로 급격히 오르면서 쌀값 폭등이라는 인상을 남기게 된 것이다.

농민 단체들은 오히려 쌀값이 정상화 되는 중이라고 설명한다. 강광석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쌀 한 가마니 당 생산비가 올해는 24만2000원까지 올랐다”며 “그런데 아직 24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쌀값이 폭등이라고 하는 건 언론에서 침소봉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정책위원장은 “20년 전 수준의 가격을 겨우 회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UN과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계속되자 세계식량계획(WFP)는 지난 9일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대북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헤르버 페르후셀(Hervé Verhoosel) 대변인은 “북한 전체 인구의 40%에 달하는 1천 만명 이상의 주민들이 여전히 불안정한 식량공급에 시달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이 절실하다”며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로 발육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정부는 남북 관계개선에 힘입어 국제기구를 통해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보고 자료에서 “북한 주민 대상 인도적 지원은 지속해서 추진한다”며 “영유아임산부 등 취약계층, 감염병 예방 등 보건의료 분야를 우선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기조 유지가 이어지면서 실제 지원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3. 혐오·증오·편견에 기반한 가짜·허위·조작 정보 생산과 유통에 범 사회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적 신망이 높은 종교인·종교인들이 시민사회와 함께 적극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1) 가짜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와 대책을 마련하라는 국민적 요구와 여론이 계속 비등하고 있습니다. (KSOI 10월 정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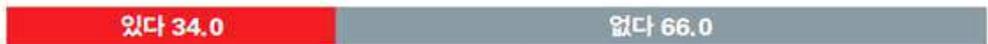
- 국민 90%는 허위조작정보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고, 엄중한 대응에 대해서는 81%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응이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보수논객 탄압이라는 주장에 대해 59.6%가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2) 구글과 유튜브의 가짜허위조작 정보 범람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매우 큰 상황입니다.

유튜브로 유통되는 허위정보/가짜 뉴스에 대한 인식 (단위: %)



최근 허위/가짜 뉴스라고 판단되는 유튜브 동영상을 보거나 전달받은 경험 (단위: %)



출처: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 온라인 설문조사(2018년 8월20~24일, N=1,218)

3) 온갖 가짜·허위·조작 정보들에 대한 범 기독교 내지 범종교인 팩트체크 센터도 만들고, 공론화 및 사회적 대응 논의에 범 기독교계가 적극 참여했으면 합니다.

-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허위조작정보유통방지법에도 적극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다만, 처벌이 능사도 아니고 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또 정부나 권력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의도로 악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도 내고, ‘공론화’와 ‘사회적 논

의와 합의'를 거쳐서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이라면 누구라도 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을 수립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미디어 리터러시 및 미디어 수용 교육이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꼭 도입되어야 하고, 범 종교계·범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미디어 수용 교육 및 가짜허위조작 정보 감시 운동에 자발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언론개혁 시민단체들과 범 종교계·범시민사회단체들이 '서울대 팩트체크 센터'를, 범 시민사회 팩트체크센터 및 팩트체크 SNS시스템 등을 함께 운영하는 것도 적극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것을 통해, 중요 사회 현안 및 폐해가 심각한 가짜허위조작 정보에 대한 사회적 대처를 공동으로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 가짜허위조작정보 대책은 특정한 정파의 유불리는 따져야 하는 정치적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가짜허위조작정보가 건강한 공론장과 여론형성을 위협하고,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파괴해나가는 심각한 문제이기에 우리 사회가 시급히 대응해야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또, 가짜허위조작정보의 최대 피해자는 우리 국민들이고 기존의 언론들이고, 사회적 신뢰에 기반한 사회공동체라는 점에 있어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매우 절실한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에 대한 범 사회적 대책을 추진하되, 반드시 종교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언론인, 언론감시단체, 관련 사업자, 언론 소비자 등 각계각층이 모두 참여하는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 틀을 통해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 정치적 이해관계가 논란이 되는 문제일수록 사회적 공론화 저러, 사회적 합의의 과정이 몹시 중요하다고 생각해봅니다.

[사설] '가짜뉴스' 대책, 사회적 공론화가 우선이다³⁶⁾

'가짜뉴스' 대책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여야가 국회에 내놓은 법안을 둘러싸고도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등 공방이 적잖다. 최근 <한겨레> 보도로 다시 촉발된 논의가 제대로 결실을 보려면 여러 논점을 두루 살피며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가짜뉴스의 개념부터 제대로 정리해야 논의가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7월 소속 의원 110명 명의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치적 또는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고의로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언론보도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의 정보'라고 정의했다. 박광온 민주당 의원 등 29명이 지난 4월 가짜뉴스 유통방지법을 발의하면서도는 언론사가 정정보도를 했거나 법원·언론중재위·중앙선관위가 허위사실로 판정한 정보를 가짜정보로 규정했다. 입법이나 대책 마련에 앞서 개념을 좀더 구체화·명확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제재할 경우에도 가능한 한 그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짜뉴스의 피해에 대한 사회적 공유도 필요하다. <한겨레>가 보도한 에스더의 소수자 혐오보도 사례나 5·18 북한군 개입설 등 가짜뉴스가 유튜브 등에 넘쳐나고 있으나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공론화는 여전히 미흡한 단계다. 문제는 대책이다. 가짜뉴스의 심각성에 대한 개념 정리와 충분한 공유가 이뤄지기 전에 법과 공권력에 의한 대응이 앞서 나가면 자칫 표현의 자유 위축 훼손이 우려된다. 지난 정권 시절 미네르바 사건 등을 겪으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한목소리로 비판했던 경험을 되새겨 봐야 한다. 특히 수사기관이 앞장서는 것은 피해야 한다. 박 의원이 뒤늦게나마 “학계·시민사회·언론 등이 참여하는 공론화 모델을 통해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것은 기존 법에 구멍이 있기 때문이므로 법적 보완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하면 법 개정만으로 가짜뉴스가 없어질 리도 없다. 구글이 가짜뉴스 사이트에 광고 게재를 막는 등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하다. 무엇보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의 자율 규제와 언론기관들의 상호 비평이나 팩트 체크 등을 통해 가짜뉴스를 공론장에서 도태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

- 예) 서울테 언론정보연구소의 팩트체크센터 :



- 한국에서 팩트체크 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출범
- 하나의 팩트체크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 SNU 팩트체크의 특징
- SNU 팩트체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22개 언론사들이 팩트체크한 콘텐츠를 공유,
- 이를 네이버에 게시하면서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모델

36)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7204.html>

- 하나의 팩트체크 협력네트워크를 구성한 것이 SNU 팩트체크의 특징
- 언론사들이 함께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팩트체크라는 단일한 목표 아래 하나의 플랫폼에 느슨하게나마 협력하는 의미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
-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팩트체크는 각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결정
- 검증내용 역시 각 언론사가 독립적으로 취재한 결과임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는 각 언론사가 팩트체크한 내용을 게시할 수 있는 플랫폼만 제공
- 팩트체크 대상의 선정, 취재, 보도에 서울대학교는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음
- 현재 22개 언론사 참여
- 서로 반박이 되는 팩트체크가 가능함
- 하나의 팩트에 대해 여러 언론사가 복수로 팩트체크 할 수 있는 구조임
- 팩트체크는 복수의 언론사들이 참여하는 교차검증을 통해 사실성 판단의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음

4) 이미 해외 주요 국가들이 가짜허위조작정보 문제에 대해 공론화 모델을 통해, 해법 마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독일은 몇 가지 사회적 기준을 설정해 플랫폼에 강력한 대책 의무를 부여하는 네트워크 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아래는 해외 사례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처 : 한세대 신문방송학과 홍숙영 교수 발표자료 중)

독일 : Network Enforcement Act (NetzDG)

-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
- 콘텐츠가 "명백하게" 불법인 경우 24 시간 이내에 소셜 네트워크 제공 업체에 의해 차단되어야 함
- 불법 콘텐츠는 증오, 모욕, (의도적인) 명예 훼손 등을 포함하며 독일 형법의 특정 범죄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
- 불법 콘텐츠는 일반적으로 불만 사항을 접수 한 후 7 일 이내에 차단해야 하며 콘텐츠를 업로드 한 사용자에게 불만 사항에 응답할 기회가 주어질 경우 7 일 연장 가능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지 않을 경우 최대 5 천만 유로(650억 원)의 벌금 부과
- 사업자는 이런 내용을 6개월마다 모니터링하고 조치 결과를 당국에 보고해야 함

영국

- Action: Parliamentary report and task force
- Focus: Misinformation and foreign disinformation campaigns
-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18개월 동안 심사숙고한 뒤 영국 의원들은 7월 29일 보고서를 발표함
- 의회의 디지털문화미디어스포츠헬위원회는 "가짜 뉴스(fake news)"라는 용어를 거부하고 기존의 미디어 규정을 온라인 뉴스에 적용하며 잘못된 정보(misinformation)가 어떻게 확산되는지를 연구하는 실무자 그룹을 만들 것을 권고함
- 영국 정부는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맞서 싸우는 임무를 담당하는 국가안보소통국(State Security Communications Unit)을 구성함

5) 구글과 유튜브에도 큰 영향력에 따른 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구글, '5·18 북한군 침투'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거부³⁷⁾

민주당이 삭제 요청한 104건에 “가이드라인 위반 없음” 통보
박광은 “공적 규제 필요성 반증”

더불어민주당이 유튜브에서 유포되고 있는 100여건의 허위조작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가 이를 거절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박광은)는 지난 15일 구글코리아를 방문해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있는 104개의 콘텐츠를 자체 가이드라인에 따라 삭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구글코리아는 “(가이드라인) 위반 콘텐츠가 없음”이라는 답을 보내왔다고 23일 밝혔다. 민주당은 ‘5·18광주민주화운동은 북한군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내용 등 명백한 허위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런 동영상 콘텐츠가 “5·18광주화민주화운동 유공자는 물론 유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민주화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서 사회갈등을 조장하여 국민통합을 가로막고 있다”며 구글코리아의 삭제 거부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광은 의원은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불량식품이 가게에서 팔리는데 가게 주인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얘기할 순 없는 일”이라며 “구글의 이번 대응을 보면서 허위조작 정보가 거의 무제한으

로 유통되는 것에 대해서 공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유튜브와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한 ‘가짜정보 유통 방지법’을 발의한 박 의원은 “사회관계망 사업을 하는 분들은 거기 모은 수많은 상품들이 범죄적인 것인지 불량한 것인지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독일법이 그 모니터링을 규정했다”며 “그 책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안을 국민, 언론, 사회단체가 힘을 모아서 국회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 A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5.18광주민주화운동의 북한군 개입설’을 주제로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5.18을 허위사실로 왜곡, 날조했습니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의한 규정 등을 적용하여 프로그램 관계자에게 징계 및 경고조치 하였습니다. B방송도 ‘5.18 북한군 개입의 진실’이라는 주제로 대담을 하여 방심위로부터 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이같은 심각한 허위조작정보가 유튜브에서 재생산되고, 유통되고 있습니다.
-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 사례와 같이 해석과 판단이 필요 없는 명백한 허위조작정보들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삭제의무를 부여해야 합니다. 즉 개인보다 플랫폼에 대한 공적규제가 허위조작정보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대책인 것입니다.
- 심지어, 작년 3월 유튜브가 백인 우월주의, 나치, 소아성애 등 각종 극단적인 내용과 혐오, 증오를 일으키는 채널에 총 300개 이상의 기업이나 정부기관 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한국의 공기업 등 공공광고가 문제 많은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앞에 붙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부터 서둘러 해결해야 합니다. 

37) 기사 원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67039.html

